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 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목적 ····· 1

Ⅱ. 감사기간 ·····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55개 기관) ····· 2

Ⅳ. 감사실시 경과 ····· 3

1. 감사반 편성 ·····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 5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 7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 12

1. 산업통상자원부 ····· 12

2. 중소기업청 ····· 34

3. 특허청 ····· 41

4.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개 기관) ····· 44

5. 한국수력원자력 ····· 63

6. 한국가스공사 ····· 71

7. 한국석유공사 ····· 84

8. 한국지역난방공사 ····· 93

9. 대한석탄공사 ····· 94
10. 한국광물자원공사 ····· 95
11. 한국무역보험공사 ····· 99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02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06
14. 중소기업진흥공단 ····· 108
15. 한국산업단지공단 ····· 109
16. 한국전기안전공사 ····· 114
17. 한국가스안전공사 ····· 118
18. 에너지관리공단 ····· 123
19. 한국광해관리공단 ····· 126
20. 한국석유관리원 ····· 129
21. 한국전력거래소 ····· 133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36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38
24. 한국디자인진흥원 ····· 140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42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44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145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46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47
30. 한국전력기술 ····· 148
31. 한국원자력연료 ····· 149

32. 한전KPS ····· 150
33. 한전KDN ····· 151
34. 한국가스기술공사 ····· 152
35. 강원랜드 ····· 154
36. 기초전력연구원 ····· 155
37. 전략물자관리원 ····· 156
38. 한국표준협회 ····· 157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58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159
41. 중소기업유통센터 ····· 160
42. 한국벤처투자 ····· 161
43. 한국발명진흥회 ····· 162
44. 창업진흥원 ····· 163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64
4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165
47. 한국특허정보원 ····· 166
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67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68

1. 산업통상자원부 ····· 168
2. 중소기업청 ····· 177
3. 특허청 ····· 180
4.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개 기관) ····· 182

5. 한국수력원자력 ····· 185
6. 한국가스공사 ····· 188
7. 한국석유공사 ····· 190
8. 한국지역난방공사 ····· 191
9. 대한석탄공사 ····· 192
10. 한국광물자원공사 ····· 193
11. 한국무역보험공사 ····· 19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96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97
14. 중소기업진흥공단 ····· 198
15. 한국산업단지공단 ····· 198
16. 한국전기안전공사 ····· 200
17.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
18. 에너지관리공단 ····· 202
19. 한국광해관리공단 ····· 204
20. 한국석유관리원 ····· 205
21. 한국전력거래소 ····· 206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7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208
24. 한국디자인진흥원 ····· 209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10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11
27. 한국세라믹기술원 ····· 212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12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12
30. 한국전력기술 ····· 213
31. 한국원자력연료 ····· 213
32. 한전KPS ····· 214
33. 한전KDN ····· 214
34. 한국가스기술공사 ····· 214
35. 강원랜드 ····· 215
36. 전략물자관리원 ····· 215
37. 한국표준협회 ····· 215
38. 기초전력연구원 ····· 216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216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217
41. 중소기업유통센터 ····· 217
42. 한국벤처투자 ····· 218
43. 한국발명진흥회 ····· 218
44. 창업진흥원 ····· 218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219
4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219
47. 한국특허정보원 ····· 219
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19

Ⅶ. 특기사항 ····· 221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 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감사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

2014. 10. 7(화) ~ 10. 27(월) [21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5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기술
특 허 청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한국남부발전	한국표준협회
한국동서발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서부발전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창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전력거래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없음

◦ : 서면감사 기관(12개)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 편성

<table>
<tr><td>감
사
위
원</td><td colspan="2">◇ 위원장 :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
◇ 위　원 : 이진복(새누리당)　　◇ 위　원 :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길정우(　〃　)　　노영민(　〃　)
김동완(　〃　)　　박완주(　〃　)
김상훈(　〃　)　　부좌현(　〃　)
김한표(　〃　)　　오영식(　〃　)
여상규(　〃　)　　이원욱(　〃　)
이강후(　〃　)　　전순옥(　〃　)
이정현(　〃　)　　전정희(　〃　)
이채익(　〃　)　　조경태(　〃　)
이현재(　〃　)　　추미애(　〃　)
張倫碩(　〃　)　　홍영표(　〃　)
전하진(　〃　)　　홍익표(　〃　)
정두언(　〃　)　　김제남(정 의 당)
정수성(　〃　)　　(30인)
최경환(　〃　)
홍지만(　〃　)</td></tr>
<tr><td>사
무
보
조
자</td><td>◇ 위원회 직원(14인)
-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 전문위원　김광묵
- 입법조사관　유인규
-　〃　장영환
-　〃　김소정
-　〃　남궁인철
-　〃　서재만
-　〃　황영준
-　〃　서호진
-　〃　황준연
-　〃　서은철
-　〃　한예슬
- 입법조사관보　이광전
-　〃　임주형</td><td>◇ 의원보좌관(30인)

◇ 정책연구위원
- 새 누 리 당 : 이　활(2급상당),
박덕제(4급상당),
- 새정치민주연합 : 김성수(1급상당),
황현선(4급상당)

◇ 속기주무관
- 박윤혜, 한연미, 제신지,
채지희, 정다운</td></tr>
</table>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10/7(화)	10:00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회	
10/8(수)	〃	현장시찰	A반 : 익산 B반 : 당진, 부평	
10/10(금)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국회	
10/13(월)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14(화)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회	
10/15(수)	〃	자료정리		
10/16(목)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10/17(금)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회	
10/20(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회	
10/21(화)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국회	
10/22(수)	〃	자료정리		
10/23(목)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회	
10/24(금)	〃	현장시찰	A반 : 광주 B반 : 경주, 울산	
10/27(월)	〃	종합국감	국회	

: 서면감사 기관

3. 기관별 서류제출요구 현황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1,095	
중소기업청	632	
특허청	541	
한국전력공사	833	
한국가스공사	626	
한국석유공사	595	
한국지역난방공사	484	
한국수력원자력(주)	726	
한국남동발전(주)	570	
한국남부발전(주)	577	
한국동서발전(주)	568	
한국서부발전(주)	555	
한국중부발전(주)	566	
대한석탄공사	514	
한국광물자원공사	5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68	
한국무역보험공사	513	
한국전기안전공사	486	
한국가스안전공사	565	
에너지관리공단	451	
한국전력거래소	525	
한국광해관리공단	4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86	
한국석유관리원	47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2	
한국산업단지공단	4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27	

감 사 대 상 기 관	요구건수	비 고
한국디자인진흥원	391	
한국세라믹기술원	313	
한국전력기술(주)	456	
한국가스기술공사	503	
한전KDN(주)	353	
한전KPS(주)	437	
한전원자력연료(주)	289	
인천종합에너지	319	
기초전력연구원	311	
㈜강원랜드	412	
한국표준협회	39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305	
전략물자관리원	30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14	
중소기업진흥공단	47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3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7	
창업진흥원	415	
한국벤처투자	415	
중소기업유통센터	407	
한국발명진흥회	35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6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65	
한국특허정보원	369	
합 계	25,928	

4.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1) 증 인 : 49인(출석 46인, 불출석 3인)

출석일/피감기관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10/10(금) 중기청 등	구지은	아워홈 전무	출석	아워홈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강남훈	現 홈앤쇼핑 대표이사	출석	홈앤쇼핑 운영 관련
	강현구	現 롯데(우리)홈쇼핑 대표이사	출석	제7홈쇼핑(중소기업전용)신설과 관련한 신문 및 질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출석	중기적합업종 지정 실태 관련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대기업편향과 법제화 논쟁 관련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	출석	동반성장평가 자료 허위제출로 우수등급 취소처분 받은 사유 관련
10/13(월) 산업부	도성환	홈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출석	최근 3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등급 사유 및 향후 시정계획
				홈플러스 로열티 문제 및 비도덕적 경영 관련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	출석	이케아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출석	외촉법 개정 후속투자 이행 관련
	김양호	現 삼척시장	출석	삼척 원전유치 주민투표 관련
	윤장효	SK 종합화학 전무	출석	외촉법 개정 후속투자 이행 관련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	출석	알뜰주유소 사업관련 정유사 입찰 비리 관련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출석	무역협회 사업영역 및 자회사 운영 관련
	전경식	㈜소프트플레이코리아 대표이사	출석	가맹점 부당 거래 관련
	김대수	前 삼척시장	출석	삼척 원전유치 주민투표 관련
	이연우	삼척시 원전유치협의회 前 총괄국장	출석	
10/14(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대표이사 회장	출석	마리오아울렛 신축허가 관련 특혜 시비 및 입주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관련

출석일/ 피감기관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10/16(목) 한전 등	김은수	리트코 대표이사	출석	발전사 탈질설비 문제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석	태안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등
	황태현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출석	
	이재덕	GS EPS 상무	출석	공급의무화제도(RPS)관련 실적현황, 불이행 사유와 제도의 합당성 여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등
	남성화	前 남동발전 영흥화력 노조 지부장	출석	발전노조 탄압과 부당해고 관련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출석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 및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 관련
	석원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위원장	출석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 점검 관련
	이우규	포스코에너지 전무	출석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민간발전사들의 업체간 거래에 의한 국민부담 관련
	서충일	STX그룹 사장	출석	
	이도식	GS 동해전력 대표이사	출석	
	박수정	동양파워 대표이사	출석	
	목진휴	국민대 교수, 밀양특별지원협의회 위원장	출석	밀양 송전탑 특별보상 및 개별보상의 적정성 여부
	김수창	한국전력공사 차장	출석	밀양 특별지원 관련
10/17(금) 한수원 등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	출석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주설비 공사에 대기업 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업체 불공정 행위 지적. 대중소 상생에 역행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출석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과 문제점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출석	노후 원전의 안전대책 문제점과 대안
	박재석	現 세안기술주식회사 대표	불출석	방사선 안전관리원 외주용역 관련
	윤덕호	㈜액트알엠티 이사	불출석	
	김영수	로이드 레지스터 아시아社 전무	출석	재검증 추진 업무 및 인력운용 현황 등 점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출석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운전가능성평가와 원전안전, 해외 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 관련

출석일/ 피감기관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10/20(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김동욱	삼성전자 상무	출석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R&D 세액공제 지원 등 R&D관련 대·중소기업의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
10/21(화) 대한석탄공사 등	김신종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출석	볼레오사업 등 해외투자 사업 결정 관련
10/23(목)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	출석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 인수당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질의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석	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담합 관련
	김영철	통영예선 대표이사	출석	가스도입선 관련 비리 질의
	김경율	회계사	출석	공기업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10/27(월) 종합국감	김청룡	농협유통 대표이사	출석	2014년 6월 11일 발표한 2013년 총 100개 업체의 동반성장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업체이므로 왜 해당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했는지 확인 및 대안 마련 촉구
	최종양	이랜드 월드 CEO	출석	
	구본걸	LF(옛 LG패션) CEO	불출석	
	이삼선	現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사장	출석	한전산업개발 부실경영 및 인사비리등 관련
	윤기영	現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감사	출석	
	김영한	前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사장	출석	
	우종철	現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출석	

※ 10/23(목) 김경율 회계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인선서 후 증인 신문함.

※ 증인 출석장소는 전일 국회 산업위 회의실

(2) 참고인 : 19인(출석 14인, 불출석 5인)

출석일시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10/7(화) 특허청 등	김민규	변리사	출석	미국 대형의류업체와 국내 소셜벤처업체 사이의 상표권 분쟁 관련, 공익변리사제도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
10/10(금) 중기청 등	신근식	경기도 상인연합회 상생위원장	출석	전국 전통시장 순회 실태조사 결과 및 정부재정 지원 효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출석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전반 관련
	김성진	변호사	출석	
	방기홍	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출석	중기적합업종 선정 관련
10/13(월) 산업부	김윤재	고려대 기계공학 교수	출석	기술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관련
	김태규	한남대 비즈니스통계학 교수	불출석	
	정용주	경기가구산업연합회 회장	출석	이케아 입점에 따른 국내 가구업체 및 인근중소상권에 미칠 영향과 입장관련
10/16(목) 한전 등	서보명	밀양주민	출석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특별보상에 관한 문제, 개별보상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 문제 관련
	문복권	전기검침원	출석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전기검침원 문제
10/17(금) 한수원 등	전용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출석	방사선 안전관리원 외주용역 관련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불출석	노후 원전 안전문제 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불출석	노후 원전 안전문제,원전 방사능 관리 실태 및 문제점 관련
10/21(화)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최재흥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출석	폐석면 복원사업 및 폐광산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발생중인 백적화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마련 촉구
	김경율	회계사	출석	공기업의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출석일시	성 명	직 책	출석여부	신 문 요 지
10/27(월) 종합국감	신민식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위원장	출석	한전산업개발 부실경영 및 인사비리 등과 관련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불출석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석	PC방 업주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질의
	이승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	불출석	

※ 10/23(목) 김경율 회계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인선서 후 증인 신문함.

※ 참고인 출석장소는 전일 국회 산업위 회의실

Ⅴ. 주요 감사실시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획조정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의원실에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관련 - 사전검열된 자료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 -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관련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출자회사 총 273개 중 43개가 자본잠식상태이고, 3년간 적자인 회사는 96개로 50% 이상임 - 부실한 출자회사는 과감히 정리하되, 에너지공기업이 핵심사업을 부채의 무조건 감축을 이유로 핵심사업을 매각하려 하지는 않는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을 재검토할 필요 - 남부발전이 출자한 회사에 퇴직관료를 낙하산으로 보낸 사례 등 에너지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에 모기업의 퇴직직원이 재취업하여 방만하게 경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공기업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 - 5개 발전사가 민간 전기업체를 육성한다고 10년간 30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사례, 남동발전 직원 중 전기공사업체의 접대를 받은 직원이 승진했다가 취소된 사례, 가스공사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공사 부채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라크에서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사례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와 감독 필요 - 가스공사 등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시정 필요 - 한수원 폐로 관련 비용 등 미래에 지출이 확실시되는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 목적사업 충당부채에 대비하여, 현금화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강제 적립하도록 할 필요 - 한국가스공사 등이 영구채를 발행해서, 장부상으로만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영구채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 - 공기업의 사택 구입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단체 890여개 중 상당수가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므로, 지방이전 보조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 -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경영평가 위원에게 용역을 주는 사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조치 필요 ○ 산업부 및 소관기관 성범죄 관련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위직 참여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있음. - 성범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과 성범죄 발생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혁 방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장관실, 산하기관장 사무실 등에 도청 방지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국가중요시설의 위치 등 관련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글(Google)을 통해 쉽게 검색되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정보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할 필요
무역투자	○ 수출실적 관련 -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출실적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주력 수출업종이 부진이 큰 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외국인투자 관련 - 외국인투자액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많으나, 과세자료 관리 등 사후관리가 부족하므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전략물자 관련 - 전략물자 수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 ○ 전시 산업 관련,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상 민간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려면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여 민간기업의 실질적 참여가 어려우므로 법령 개정이 필요 ○ 무역협회 자회사인 KTNET 관련 - 국비로 구축된 uTH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의혹, 통신망 기본료 별도 부과로 인한 이중부과의 문제, 구매확인서 전자화 사용 의무화로 인한 무역업체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무역보험 관련 - 모뉴엘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현장 실사없이 서류에 의존하면서 나타난 측면이 크므로, 보증심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 -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및 경과를 보고할 필요
산업정책	○ 경제활성화 관련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만들 필요 - 국내 제조업을 살릴 방안 마련 필요 ○ R&D관련 - 뿌리산업 R&D비중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대책 마련 필요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R&D자금을 마련할 필요 -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체적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섬유패션산업 관련 - 패션산업 활성화 대책 필요 - 의류는 섬유세라믹과 소속으로, 가방·주얼리·안경 등은 디자인생활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시정 필요 - 국내 패션 산업 진흥을 위한 전시회 지원이 필요 ○ 자동차 산업 관련 - 그린카 발전전략은 수립하였으나, 실제 수행이 미흡한 문제 - 전기차와 수소차는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수행할 필요 -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정부·지자체·한전 간 적절한 역할분담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LNG 에코쉽 도입으로 조선사업에 활기를 넣을 필요 ○ 해양플랜트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설계 및 기능 인력의 부족하므로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우수 해외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
산업기반	○ 유통분야 관련 - 이케아(IKEA)가 가구전문점인지 대형마트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영업규제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에 유출·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자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도이행이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협력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특산물 매장이 설치되도록 하는 강안을 강구 필요 ○ 지역경제 발전 관련 -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사업에서 공모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필요 - 노후 산업단지 혁신사업 관련 지침이 없으므로 지침을 마련할 필요 - 산업단지에 대해서 현재는 조성 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개발은 LH가 관여하고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발·분양·관리의 일관된 체계를 갖출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보조금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고, 보조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할 필요 - 국가산단 지정에 있어 지역별 특성 및 실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단지는 실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할 필요 ○ 노후 산업시설 개선 및 재생 촉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기술개발과 산업계의 애로요인 해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이 미흡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 등은 신기술인증(NEP)제품을 20%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기술인증(NEP)제품의 의무구매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할 필요 ○ R&D 전담기관 관련 - 재료비 및 장비 부실, 불법 사용한 사례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연구노트에 대한 수불관리대장을 의무화하여 재료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 필요 - R&D성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관의 검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조치 필요
통 상	○ 통상차관보의 직위로 통상분야 대내외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상차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개별 FTA 등 통상협상 현안 -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추월하는 차이나 리스크 고려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중 FTA에서 자연인 이동 허용시 국내 실업률 상승 및 서민 일자리 박탈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자국기업보호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을 진행할 필요 - 한·중 FTA를 APEC 정상회담 전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위험함 - 한·미 FTA 전문직자격상호인증(MRA)분야의 논의 실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미국의 주(州)별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나므로, 미국 중앙정부와 1:1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일본의회의 TPP 협상참여 반대결의가 미·일간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국회 통상소위에서도 진행 중 협상에 대한 상세한 점검 필요 - TPP 관련해서 일본 국회가 무조건적인 관세 철폐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 미국과의 협상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FTA, TPP 등 통상 관련 협상을 국회 통상소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 - TPP 대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 포함, 오렌지 등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 - 비공개로 추진 중인 TPP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공공보건정책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바, 미·일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 목적의 제한에 반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 국회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 ○ 쌀 관세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DDA 협상에서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국내 쌀 가격 하락과 약 20만톤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므로, 대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 - 쌀 관세율 513% 관철시 쌀 수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농가 피해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바, 쌀 관세화로 인한 피해 발생분야를 명확히 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내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농민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내대책을 논의할 필요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임금이 낮은 국가에 관세를 철폐하여 가격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에너지 (자원개발· 공급)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 해외자원개발 관련 막대한 부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결정 당시 정부·공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외자원개발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는 문제 - 사업계획신고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은 2010년 이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 -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사업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후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하여 유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 동서발전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동서발전 자메이카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前) 사장과 전(前)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백서·평가보고서를 만들 필요 -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져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적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 ○ 석유공급, 주유소 관련 - 농협의 알뜰주유소는 10곳 중 3곳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고, 실제로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곳은 알뜰주유소의 10% 미만에 그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 과정이 분절화되어 있어, 석유관리원이 불법 유통 물량·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환경관리공단은 정유사로 이관 후 판매대금수입을 공단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 - 가짜석유 문제에 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적발처리 시스템을 만들 필요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혼합 석유가 가짜석유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 과세환급체계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가짜 석유 규제를 폐지하고 과세환급체계를 개선할 필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협의매매의 경우 거래가격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주유소의 공급 가격 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협의매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한할 필요 - 석유 혼합 판매제도를 도입했으나, 혼합판매 주유소가 없다는 문제 ○ 가스 관련 - 도시가스 요금에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 -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시 630억원 증액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고, 시험생산 계획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취소되는 등 사업 관리 부실 -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이 수행한 용역 과제들이 서로 유사·중복되는 등 내용이 부실하므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 - 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외에 독성가스 안전도 관리하도록 할 필요 -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출자한 대한광물은 희토류가 상당량 매장되어있다고 허위로 홍보하여 설립전후 주가가 폭등한 바, 주가조작이 의심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할 필요
에너지 (전력 ·원자력)	○ 전력수급 관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상승률을 과소 추정하고 GDP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수요 예측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설비에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문제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잉여설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수요-공급간 격차와 삼척 원전 건설 당위성 등을 재검토해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 - 전기난방 증가 등으로 동계에 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 전력시장의 특징과 전력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 전력 피크타임에 비상발전기를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발전기에 무정전절체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 제4차 신·재생에너지계획 및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발전소 온배수는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의 공론화 절차가 필요 -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재생에너지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 - 원전 건설에 대한 입지갈등비용이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폐로비용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전력수급계획을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과감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정책 시행에 따라 우드펠릿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개발한 바이오 콜 펠릿을 상용화하여 우드펠릿을 대체할 필요 -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등에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 - 현재 해상풍력발전에 부여하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 일부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 초반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책정할 필요 - 발전차액지원(FIT)제도에 대한 국가REC의 운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RPS제도 역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원도 석탄, LNG 등 다른 에너지원과 같이 원가를 감안하여 일정한 이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한전은 송배전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이므로 원전 수출, 신재생에너지사업까지 할 경우 발전 공기업의 역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분담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 - 한국전력공사가 '20년 까지 45조원을 투자하여 해상풍력발전,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폐염전에 태양광설비 설치 시 송변전선비용을 전력기금이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성강댐 유역변경식 발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보성강댐을 농업용수 공급 등에 이용하지 않고 유역변경식 발전을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 - 보성강댐의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 탄소포집기술 관련 - 해외에서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나, 정부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과징금 수준(톤당 최대 3만원)이 이산화탄소 처리비용(톤당 5만원 이상)보다 낮아 기업입장에서 탄소포집기술에 대한 개발 유인이 적다는 문제 -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은 이산화탄소 저장소 마련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탄소 포집 및 재활용(CCU)” 기술에 대한 실증·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조건은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화력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LNG복합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노후된 화력발전소 폐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 - 정부가 '08년에 노후 화력발전소를 IGCC 발전소로 교체하고 동 기술을 동남아 등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계획대로 진행할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으로 인하여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산업부가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 ○ 원전 해체 관련 - 원전해체비용이 막대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폐로 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하여 폐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 - 원전 1기 당 약 6,000억원의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나 현금성 자산이 1조원에 불과하여 향후 실제 해체자금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문제 - 고리1호기 등 장기가동 원전의 경우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원전을 유지하여 얻는 이익보다 클 수 있음. 원전 해체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원전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원전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은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현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전 해체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사용할 필요 ○ 송・변전 관련 - 직류송전(HVDC)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 - 아직까지 선하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송전탑이 다수 있으므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완료할 필요 - 신한울~신경기 송전선로 등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수준이 과다하므로 현행 3.7%의 부담금요율을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원전 정산단가가 유연탄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한수원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전력 신기술 지정 관련 - 전력 신기술인 직접활선공법(전력신기술 제10호)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기업계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 - 전력 신기술 공법의 주된 사용자인 한전의 사장이 전력 신기술 공법 심사를 담당하는 전기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는 신기술 심사가 이루지고 있는 문제 - 전력신기술 심사위원의 풀이 협소하여 사전로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신기술 심사절차와 달리 현장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신기술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문제 - 산업부가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업무를 위탁한 전력신기술협회는 전력신기술개발업체의 회원조직으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받기 위하여 활용실적을 부풀리고 있는 문제 - 전력신기술이 수의계약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차세대EMS라는 부실한 계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 문제 - 전력신기술 제도의 운영 및 심사를 전기협회에서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 등에 이관하여 별도의 심사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할 필요 ○ 한수원 보안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한수원 직원의 보안의식이 낮은 문제 - 한수원 직원은 2~3년 주기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근무하고 있어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더 높은 상황임 - 한수원이 용역 업체와 아이디·패스워드를 공유하는 등 구조적·관행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 삼척 원전 유치 갈등 관련 - 원전건설은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사업 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삼척 원전 관련 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문제 - 삼척 지방의회는 당초 주민투표를 전제로 원전을 유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신청한 문제 - 삼척 원전 유치 신청 시 제출된 주민 동의서는 조작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필요 - 현재 계획 중인 원전만으로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삼척 원전부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는 철회할 필요 - 원전의 유치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 - 주민투표로 인한 갈등 유발 위험성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원전 안정성 관련 -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안정화 등에 있어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국내에서 건설되는 원전은 수출형 원전과 달리 항공기 충돌 등을 상정한 보호시설이 없는 등 안전관리에 취약함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보이고 있는 문제 - 원전 비상발전기의 경우 유럽 수출 원전은 108시간 까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비상발전기 가동시간이 8시간에 불과한 문제 - 국민이 원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원전·방폐장 운영 정책 관련 - 현 방폐장 규모로는 고리·월성·삼척 지역 등의 신규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 신규원전의 건설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연장운영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원전 및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관한 주민신뢰를 확보할 필요 - 월성 중·저준위 방폐장은 과잉 투자를 지적받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시공하였으나 안전당국의 승인이 늦어져서 오히려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문제 -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 - '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소재지는 원전 집적도 및 주민수용성을 감안하여 확정할 필요 ○ 원전 비리 관련 - 원전 부품 납품업체 및 품질검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원전관련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다른 대표자를 내세워 이름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바꿔서 다시 한수원 협력업체로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 - 비리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해당 업체가 우회적으로 부품납품에 참여하는 상황을 근절할 필요 -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문제 ○ 정부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전문성 있는 해외기관으로 하여금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의 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한 해외기관(영국 로이드社)의 전담팀 중 해외인력은 9명(전체 38명)에 그쳤으며, 국내인력의 일부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전력이 있는 한수원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이 중 일부는 재검증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필요 시 검찰 고발 필요(단, 자체 감사 미흡 시 감사원 감사요구)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전정책 관련 '국민소통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전정보 공개시스템'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발전소 및 방폐장 주변지역 관련 -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오염과 불편에 대한 보상을 위해 면적 외에 인구비율까지 포함하여 지원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면적과 소재지에 대한 지원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구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에도, 이미 월성원전에는 건식 저장시설을 두고 있다는 문제 - 월성원전 내 온배수 양식장에 123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동 예산으로 온배수와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시감독이 없으므로, 감독 강화 필요 ○ 전력계통・전력시장 운영 및 계통운영시스템(EMS) 관련 - 단일계통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급전소를 3개씩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없음에도 나주로 중앙급전센터를 이전하는 전력거래소가 서울급전소를 불필요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문제 - 중앙급전센터가 무너지면 전국의 모든 발전기가 정지되므로 수도권만 따로 계통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전력거래소가 서울 급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 - EMS는 거리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중앙급전센터를 나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관제센터는 불필요한데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문제 - 전력거래소는 나주 이전 시 급전원의 수도권 날씨변화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계통운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에 급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전력거래소의 EMS가 예비력을 계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전력거래소가 EMS로 경제급전을 하지 않고, 시장운영규칙(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에 따라 제약발전(CON)비용을 정산함에 따라 '13년 한해에만 5조 2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낭비된 문제 -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조정신호인 AGC(자동발전제어) 4초 신호로 충분히 경제급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EMS에서 5분마다 경제급전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경제급전신호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전력거래소가 EMS를 이용해 제약비용을 산정하지 않았고, SMP를 계산하면서 평균비용 함수값을 사용하지 않고, 발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동계획프로그램(RSC)의 결과값을 미분함수 식에 적용한 결과 SMP를 높여 발전비용 과다정산을 초래한 문제 - 지난 10년간 EMS 5분 급전 자료를 제약비용 정산에 활용하지 않아 낭비한 금액과 SMP 수식 적용 오류에 의한 과다정산비용이 약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 - 전력비용 정산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전력거래소와 산업부가 전력비용 과다정산 방식에 따른 개선 방식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요구) ○ 전력계통감독원 설립 관련 - 단일계통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계통운영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계통불안과 전력비용 과다정산을 유발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전력계통 신뢰도를 감시한다는 명분하에 산업부 산하에 전력계통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 늘리기에 불과한 문제 -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용역 교수들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에 불과한 감독원 설립은 예산낭비 행정에 불과한 문제 ○ 차세대 EMS 개발 관련 - 차세대EMS를 개발한 기관 중 “한전KDN”은 기술력 부족으로 한전이 실시한 차세대 SCADA시스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LS산전”은 한전이 원하는 기술스펙을 제시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차세대EMS의 개발을 담당했다는 문제 - 차세대EMS를 전력신기술로 지정하여 이를 수의계약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 K-EMS 개발의 가장 많은 부분에 참여한 LS산전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마드그리드협회에서 전력신기술 심사평가를 받아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문제 - K-EMS의 시험운영 서류가 모두 조작되었음에도, 전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해외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언론에 거짓으로 홍보한 문제 - 한전은 차세대 SCADA 시스템에 154kV 계통해석기능을 탑재하는데, 이는 EMS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전력비용 과다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직접 전력계통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한전과 거래소가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산업부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중복업무는 묵인하고, 한전이 계통해석을 따로 실시하게 하여 계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박함으로써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덮으려 한다는 문제 ○ 동서발전의 해외자원개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전 사장 및 전 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 ○ 한전이 전기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나,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전기검침원으로 한국전력 임직원의 가족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문제 ○ 한전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부분을 한전KDN과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문제 ○ 원전건설 현장에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제 ○ 제2롯데월드의 경우 변전소(지하 3층)를 아쿠아리움(지하 1·2층) 아래에 설치함에 따라 누수 등으로 인한 전기설비 사고가 우려되는 문제
기술표준	○ 한국산업표준(KS) 마크가 위조된 중국산 철근 등이 유통·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용됨에 따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세관통관시 수입품에 대하여 안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국가기술표준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1381 인증·콜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1381 인증·콜센터에 대해 11.2%만 알고 있고, 중소기업의 이용률은 4.1%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인증기관 통합 관련 - 국제 시험인증시장에서 글로벌 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험인증기관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표준협회를 통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시 신상품인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류에도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주유기의 표준오차와 검정유효기간이 크거나 길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사건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전용용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물티슈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리콜조치 필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충분히 대응하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못하고 있으므로, 언어·기술·통상 분야 대응체계를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로스쿨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

2. 중소기업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의 조기 구축 필요 -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간소화하고, 일선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 - 적합업종 적용 대상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중견기업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협력업체 이용률과 지방은행 이용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의무고발요청권의 적극적 행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증공제사업 대기업 비중 과다 및 부실 우려, 성희롱 및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한 여직원 자살 사건 발생, 홈&쇼핑 공공성 제고 노력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기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필요
소상공인	○성과가 낮은 사업의 추진방향 재설정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신규사업 추진 재검토 및 중소기업청으로 관리·감독 일원화 방안 검토 필요 -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휴서비스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소상공인방송 시청률 제고방안 마련 ○ 소상공인 범위 재검토 -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 제고 - 지역센터 상담직 직원 처우 개선 등 조직의 화학적 통합 강화 및 비효율적 조직문화 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운영을 위한 금융 관련 전문인력 채용 ○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제도 개선 및 중기청의 관리·감독 강화 ○ 공중파 방송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 필요 ○ 울산 및 강원 지역에 소상공인전용교육장 설치 필요 ○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소공인 R&D 지원 ○ 특화거리 조성, 상인회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대기업 운영 등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강제방안이 미흡하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나들가게 스스로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노력 필요
전통시장 지원	○ 전통시장 지원 확대 및 사업관리 철저 - 전통시장의 위생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및 '혼합형 시장정비 사업' 도입 검토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전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구매·공동브랜드·공동서비스 등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원방안 검토 - 전통시장 장보기·배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영혁신 사업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합동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판매 촉진 - 할인 판매로 인한 상품권 부정유통방지 방안 마련 -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할인제도 도입, 가맹점 확대 등 검토 필요 ○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을 전향적 검토 필요 ○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필요 ○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몰의 외국산 제품 판매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활성화 대책 마련 ○ 위생적으로 불결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검토
벤처·창업 지원	○ 창업 교육 내실화 필요 - 지원성과 측정이 어렵고 교육부와 업무 중복인 비즈쿨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 - 창업선도대학의 청년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 벤처 투자 관련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마트 등을 통한 투자분위기 확산 및 엔젤투자자 발굴 강화 - 엔젤매칭펀드 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이미 투자한 기업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창업초기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가 퇴색되므로 세밀한 관리·감독 필요 - 문화컨텐츠 분야 모태펀드 투자는 투자액 중 56%가 영화에 과도하게 편중된 문제가 있으며, 업계의 일반적 관행과 동떨어진 장기간의 회수기간도 단축할 필요 ○ 거래실적이 저조한 코넥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판로 및 수출 지원	○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 공공구매 시정권고 불이행 기관이 매년 증가하므로 수시 조사 및 제재조치 강화 필요 - 위장 중소기업 및 관련 대기업 처벌 강화 필요 - 소액 공공구매(납품단가 2.3억원 미만)도 수익보장이 60% 수준이 되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보완 필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촉진 필요 ○ 홈쇼핑 관련 - 민간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판매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신제품 및 혁신제품 방영 확대, 홈&쇼핑의 소액주주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수하는 방안 검토 등 홈&쇼핑의 정상화·공공성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전용 제7홈쇼핑 설립은 신중 검토 필요 - 홈&쇼핑 자료제출 요구 불응 문제 지적 ○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강화 및 기능재편 필요 ○ 해외 중기제품전용매장 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필요 - 유럽지역 유통망 개척을 위해 독일 기센주 에데카 매장 축소 재검토 필요 - 입지 및 수행사 선정 등이 부실하였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매장의 운영방향 재검토 필요 - 위탁사 회장 회사 제품의 우대, 유명브랜드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LA 매장의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중국 등에서 팔릴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소기업 수출 규모 감소에 대응한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필요 ○엔저 현상 등에 대비한 환변동보험 집행 강화 등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 발굴 및 원산지관리프로그램 개발 지원 필요 ○중소기업 해외진출 K-KON 등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금융 및 인력 지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내실화 - 창업기업에 대한 중진공·신보·기보 간 중복 지원 개선 필요 - 정책자금 지원시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창업초기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 강화 - 저신용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 기피 문제 개선 - 민간 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및 신·기보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중소기업 인력 지원 -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세제 감면 추가 및 정부 매칭펀드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 -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성과가 낮고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사업 폐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선정 기준·절차 및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기술사관 육성사업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참여인력에 대한 중도 탈락 방지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국립공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직원 복무 관리 미흡 등 관리·감독 소홀, 안전위험 건물에 대한 예산 투자, 스크린골프장 건설 등 예산 부적절 집행 - 국립공고 교육성과, 학습권 보장여부 등 종합감사 재실시 필요
기술 지원	○ KOSBIR 제도 내실화 필요 - 그동안 KOSBIR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별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의무비율 설정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마련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 필요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중 15%가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정부 R&D 지원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매출신장과 기술료 수입 증대를 견인할 필요 ○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의 사업 운영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중소기업 정보화 및 SW 활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안전점검 방식을 전수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변경하고, 안전시설 개·보수까지 지원할 필요 - 전통시장 화재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위험 등급제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검토 ○ 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중기청 자체 시설물 중에서 안전진단등급을 받은 시설물의 73%가 C, D등급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타	○ 산하 공공기관 인사 문제 지적 - 정치권 및 중기청 퇴직인력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 -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장의 고연봉 문제 지적 -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기관의 개선 및 중기청의 지도·감독을 촉구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관련 - 저조한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홍보 강화 - 선정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54.5%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 상향 ○ 회생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 확대 유도 필요 -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재기기업 전용 펀드 운용 필요 - 금융기관에서 회생절차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3. 특허청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 정부 R&D 우수특허비율 저조에 따른 R&D과제 선정시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방안 ○ 시도별 지식재산 출원현황의 불균형 및 지역간 출원편차 해소 필요 ○ 지식재산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가 특허전략청사진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유망기술 집중 투자 필요 ○ 국가 R&D 특허성과 실태조사 확대실시 및 개인명의 특허출원의 정부환원 필요 ○ 기술중개 상담관의 업무부담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대출금 미상환시 대책 ○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대학·공공(연)의 휴면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방안 ○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기업성장 단계별 IP금융 지원방안 ○ IP스타기업이 지재권 종합지원 종료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의 현대화 필요 ○ 원자력 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한 원자력 전문 맞춤형 지원과 경주에 지식재산센터 설치 필요
지식재산 보호 정책	○ 위조상품 단속 관련 특사경의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보강 등 수사역량 강화와 지역사무소 확대 필요 ○ IP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모 확대 및 상품 다양화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 필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 교육 및 운영체계 개선 필요 ○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 방안 ○ 위조상품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부처 협력 필요 ○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제도 시행 ○ 특허침해 소송시 손해배상액의 적정화 추진을 통한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 방안 마련 ○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저조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 지재권 판례 구축 사업 성과 부실 및 개선방안 마련 ○ 법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지재권 분쟁현황 파악 필요 ○ 특허괴물의 제소남발에 대비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 대책 ○ 일본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신설 필요 ○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를 받은 변호사의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필요 ○ 수요자 중심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심사·심판 정책	○ 변호사·변리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허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 조율 필요 ○ 특허무효율 증가에 따른 심사품질 확보방안 마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품질 저하 방지책 마련 ○ 현재 지정되어 있는 3개의 선행기술조사기관 이외의 추가 선행기술조사기관 지정 필요 ○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필요 ○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심사품질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허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 특허제도 또는 심사관련 심층연구, 심사관 증원을 통한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원활한 조사 환경 마련 필요 ○ 선진국 수준의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필요
기타	○ 산하기관 재취업 및 낙하산 인사 등 전관예우 문제와 통폐합 필요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활용도 제고 필요 ○ 공모전 담당 직원 자녀의 수상 비리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 '09년 이후 계속 하향하는 특허청 청렴도 제고 대책 필요 ○ '14년 3월 시행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세입추계 오류 지적 ○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자기금에 대한 예탁보다는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및 특허진흥 분야에 예산 배정 확대 필요

4.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개 기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요금	○ 한전의 에너지 복지지원제도 홍보부족으로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기준이나 각종 복지할인 제도를 모르는 가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혜대상자의 11.4%만이 요금혜택을 받고 있음. 본인 신고제로 인해 복지할인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향후 보훈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전이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할 필요 ○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산업용전기요금이 무려 2조 487억원에 달하고 있어,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 손실을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 - 10대 대기업의 원가이하 전기요금 적용에 따른 할인액의 합계가 1조 5,356억원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대기업의 12% 수준인 2,533억원에 불과한 문제 -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전력을 제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주한미군에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문제 - 주한미군의 전력요금 수준은 국내요금이 국군의 80%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도 낮은 문제 - '62년 이후 전기공급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있어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군의 9배에 달하는 등 주한 미군의 전기 과소비가 심각한 수준임 - 전기요금 할인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전기요금 납부 관련 - 정부, 공공기관의 전기요금 미납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있으며(최근 7년간 미납금 1,107억원), 발전사 및 한전에서도 전기요금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일반 주택과 다르게 공공기관은 전기요금을 미납하여도 단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청구로 인한 환급액이 1,516억원에 달하며, 한전착오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불로 인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 1주택 다가구 요금할인 제도를 악용하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 - 동 제도를 악용한 한전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다는 문제 ○ 검침 및 계량 관련 - 국내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계량오차가 발생하여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정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 검침 실수 및 계량기 오차 등으로 인한 환불 문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 선정 방식의 재검토, 검침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검침사업자 선정, 검침 대행지원금, 검침사업 관리운영 등에 문제점과 각종 비리 의혹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재입찰 제한 등 대책마련 필요 ○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한 구간별 격차를 보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 - 현행 주택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이 아닌 경제력이 있는 1,2인 가구가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 - 산업용 전력이 전력사용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주택용에 전기절약 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누진제 구간 축소 및 구간별 요금격차 해소 필요 ○ 에너지소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료비연동제 도입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요금 인상률은 억제하며, 수익성 높은 대기업 위주로 요금 현실화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 ○ 한전이 아파트의 전기요금 수납을 도와준 대가로 아파트에 지급하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이 일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전력수급	○ 전력 정산단가 관련 - 전력거래소가 잘못된 정산단가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제약발전비용(CON)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한전의 전력구매단가가 높아졌음에도 한전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전력 정산단가의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가정용 전력수요가 매년 9%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정용기기의 전기효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관련 - IGCC발전소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로 발전단가가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실시할 필요 - 정부가 IGCC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 ○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설비 일부를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었던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산업부는 민간발전사의 발전소 건설 철회 시 패널티를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 그룹 매각 시 발전설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문제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운영	○ 선하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보상완료계획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 선하지 중장기보상계획에서는 서울지역은 '17년에 완료될 예정인 반면 대구·경북의 선하지 보상은 '30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문제 - 송·배전선로 지중화율도 지역편중이 심각함(경북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율 최하위) - 선하지 보상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제2롯데월드의 경우 변전소(지하 3층)를 아쿠아리움(지하 1·2층) 아래에 설치함에 따라 누수 등으로 인한 전기설비 사고가 우려되는 문제 - 수족관 파손 시 수위가 3.8m까지 올라가므로 이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당진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송·변전설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자인 한전이 지역과 협력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문제 - 당진화력-북당진 변전소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협의 부재 문제 ○ 전주 안전관리 관련 - 최근 3년간 38,000여개의 전신주가 붕괴되는 등 전주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문제 - 전주 통신선은 12가닥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것이 67,300개에 달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조치에 그치고 있어 시정조치가 부실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현재 전신주 안전관리는 6개월·1년·2년 주기로 정기 점검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내부 철근부식 등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 - 870만개 전주 가운데 '04년 이전에 설치된 전주 572만개는 설치시기 및 제작업체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성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문제 - 전주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13~'17년까지 1조 5천억원 투입해서 공중선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정비 후에도 공중선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 - 담당기관인 지자체와 전파연구소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 - 한전처럼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를 담당기관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 ○ 765·345kV와 같이 계통운영에 필요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이 부담할 필요 -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설치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송전망이 전체 송전망의 35%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 - 전체예산 중 송전망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3.3%에서 현재 1.7%로 축소된 문제 - 송전망 유지보수 예산 확대 필요 ○ 밀양 송전탑 관련 - 밀양 경과지에 보상합의금 이외 1억 6천만원의 현금이 지급된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전 본사 명의로 밀양의 한 개 마을에 3천 5백만원 입금 후 그 중 2천5백만원을 상품권으로 나눠주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문제 - 법적근거나 규정 없이 민원대책비로 전력설비를 견학시키고 상품권을 배부하는 것은 부적절 -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 - 송전탑건설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므로 한전이 특정인 또는 주민의 일부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전국 변압기 조사 결과 발견한 선로누전, 고객누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치 필요 ○ 전력 수요예측 실패로 '20년부터 설비예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발전소 및 관련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 ○ 신경기~신한울 송전선로 관련 - 변전소 등의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문제 - 대규모 초고압 송전설비는 원전과 같은 기저부하 발전설비의 송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발전을 강화하여 대규모 송전설비의 건설을 최소화할 필요 ○ 전신주 안전점검 기준표에 기울기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기울기 규정을 추가할 필요 ○ 국토부와의 합의를 통해 '국토이용관리계획' 작성 시 고속철로·고속국도 건설계획에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정당한 권원 없이 설치한 송전탑의 이설계획을 수립할 필요
경영관리	○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문제 ○ '12년부터 전용차량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지원을 실시하여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 전기검침원으로 한국전력 임직원의 가족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문제 - 산업부·한전의 검침원 전수조사 필요 ○ 신형 쐐기형 클램프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등 3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있으나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자체공장보다는 대부분 영세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형태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문제 -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본사 나주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이전 추진 필요 ○ 한전 임원급 인사에 있어서도 지역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승진제도 관련 - 일반시험승진에 필기시험 성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고졸직원과 대졸직원의 승진소요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 한전은 기술이 강조되는 전문회사임에도 사무직 승진자가 기술직(토목직) 승진자보다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술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할 필요 - 승진시험 준비를 위하여 업무에 소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평제도를 개선할 필요 ○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의 2대 주주로서 배당금 및 직원 재취업 등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노사관계 등과 같은 갈등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 ○ 한전·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등 출자회사나 자회사에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문제 -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민간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 ○ 한전직원과 검침원의 도전(盜電)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사여건을 감안할 때, 한전의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를 축소시킬 필요 - 다른 공기업들과 다르게 한전은 모든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 문제 - 중소기업 채산성 약화 우려 ○ 한전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캡코우데(KEPCO-Uhde)의 경우 지난 4년간 매출은 없고 부채만 늘고 있는데도 성과급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만경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발전자회사도 지분참여는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한전에 위임하여 한전이 전적으로 캡코우데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음 ○ 한전의 높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투자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책 실명제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미술품을 감정가보다 높게 구매하거나 구입한 미술품을 창고에 방치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미술품을 구입·보관하는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국내사업 (지능형전력망 에너지복지 등)	○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원격검침 사업 추진에 따른 검침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AMI를 통한 원격검침으로 인해 검침원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 소외계층 노동자인 검침인력의 실업 우려가 있는 원격검침사업을 즉간 중단할 필요 - 검침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13년 AMI 200만호 보급계획이 미추진 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 한전이 젤라인社에 특허료로 지급하는 6.8억원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 ○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등 망 사업자로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 ○ 주파수조정용 ESS 사업 추진 관련 - 한전은 6,250억을 투입하여 주파수조정용 ESS 설치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예타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실시한 문제 - 동 사업의 경우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간의 긴밀한 협의 및 조정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협의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 - ESS를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기준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전기차 사업 관련 - 한전이 전기차의 여유 배터리를 전력망으로 보내는 기술을 통하여 원전 4기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기차로 인한 전력부하 증가량은 '35년 13.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한전이 예측하는 미래에 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문제 ○ 전력신기술 관련 - 직접활선공법 등 전력신기술로 인한 사고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조건 전력신기술을 폐지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을 덮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문제 - 이미 직접활선공법(전력신기술 10호)으로 인한 한전의 발주가 9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신기술폐지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한전이 안전성 높은 공법으로 발주를 실시할 필요 ○ 히트펌프 보일러 관련 - 기존 심야보일러 기기보급으로 8년간 4조원의 손실을 봤는데, 또 다시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 -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해도 설치희망자가 8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임 - 히트펌프 기기 제조업체 6개가 모두 대기업인데 중소기업의 기기 보급시장 참여와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마련할 필요 ○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이크로 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폐염전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폐염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필요
해외사업	○ 레바논 복합발전소 사업 관련 - 한전·중부발전이 레바논에 복합발전소 운전·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켑코(KEPCO) 레바논'을 설립하였으나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해 누적 당기손실이 32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문제 - 계약 당시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계약만료 이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업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 발전자회사 해외사업 중복진출 관련 - 해외신규개발사업을 발전자회사로 일원화하여 전담하게 하려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 필요 -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중복진출이 문제가 되면 협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을 하면 되는데, 한전의 신용·노하우·규모 등의 장점을 무시하고 해외사업을 발전사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함 - 해외발전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발전사들은 운영과 정비에 집중하는 등 한전과 발전사간의 협조체계를 구축이 필요 ○ 한전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공동으로 2건의 우라늄광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1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한 곳에서는 저품질의 우라늄만 생산되어 사용이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불가능한 문제 - 충분한 사전조사나 계획수립 없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 ○UAE 원전건설 관련 운영계약 체결 시 우리나라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
전력산업 구조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등의 사례로 볼 때에도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낮음
발전자회사	○(발전자회사) 발전 5개사가 한전산업개발에 비주력 전기분야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 ○(남부발전) 환위험 관리 관련 - 남부발전은 환차손이 다른 발전사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11년부터 꾸준하게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 환위험관리위원회는 매월 환위험에 대하여 심의·보고를 해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유연탄 국제가격이 하락추세(수입대금 결재에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14년 상반기에도 68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한 문제 ○(한전, 중부발전) 레바논 복합발전소 사업 관련 - 한전·중부발전이 레바논에 복합발전소 운전·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켑코(KEPCO) 레바논'을 설립하였으나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해 누적 당기손실이 32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문제 - 계약 당시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함에 따라 계약만료 이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업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남동발전)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관련 -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조건은 5·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필요 - 전력수요예측 오류로 설비예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영흥화력 7·8호기의 추가건설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남부발전) 해외사업 추진 관련 - 철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한 해외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 - 호주 엠바사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발전자회사) 발전사들이 민간정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 - '00년 민간정비업체 육성정책에 따라 5개 발전사가 6개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하였으며 지난 4년간 총 3300억원 가량의 수의계약 체결한 문제 - 공기업 계약관계 규정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 없음 ○(남부발전) 출자회사 일감몰아주기 관련 - 남부발전의 경우 29%를 출자(정부승인기준은 30%이하)하여 민간업체와 KOPES(민간정비회사)를 설립하였음 - 3개 열병합발전소의 일감몰아주기 한 금액이 976억에 달하고 있는 문제 - 민간회사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남부발전의 설명과 달리 주주협약서(대구그린파워)에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남부발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남부발전 출신이 현재 코패스, 대구그린파워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발전자회사) 암모니아 측정기 관련 - 발전소에서 운영중인 탈질설비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기 위해 촉매제로 암모니아 사용 중이나, 암모니아는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및 악취 유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탈질설비에는 암모니아 측정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모든 발전사의 암모니아 측정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 - 현재 운영 중인 암모니아 측정기의 80%가 특정업체 제품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 한국 환경공단의 암모니아 측정기 실태조사에서 발전소 이산화황 기준(1,000ppm)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암모니아 측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문제 - 성능미달의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발전자회사) 지방이전 사택구입 관련 - 한전 발전자회사의 '본사 지방이전 계획서'에 포함된 사택매입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입절차가 불투명하므로 산업부 자체감사 필요 - (동서발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천만원 가량 비싸게 아파트 구입한 문제 - (중부발전) 총 130세대의 사택을 신축 중인데 신축단가가 민간아파트 구매비용보다 비싼 문제 - (남동발전) 민간분양 아파트(25세대) 구입 시 기존의 상례와 달리 분양대행료를 할인하지 않고 매입함 - (서부발전) 사택 615세대 건축비가 국토부 실거래가보다 높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발전자회사) 발전 5개사 출신이 산하 자회사 및 출자회사로 이동하는 '공(公)피아' 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3년차임에도 의무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RPS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의 핵심 정책인데 공기업이 민간보다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발전자회사) RPS 의무이행 실적치 중 정제유 및 부생연료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 - 현행법은 정제유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서 최근 폐유를 정제한 정제유를 발전기 기동유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폐유를 정제한 기름을 사용할 경우, 설비손상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RPS 때문에 폐유를 사용하는 건 설비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정제유 사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중부발전) 발전소 필수인력 유지 관련 - 8월 21일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 95명 중 89명이 외부 점심식사를 위해 발전소를 이탈하였는데, 같은 시각 발전노조의 공기업 정상화 관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노조의 노조활동을 회사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제 - 중부 노조원 간담회와 같은 노조 주관행사를 회사가 법인카드로 금품 제공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발전소 필수인력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산업시설의 안전과 국가기간시설의 보안문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진위확인 후 관련법에 의거 처벌이 필요 ○(발전자회사) 발전자회사가 발전연료 분할구매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최대 3조 4천억원의 연료구입비가 낭비되었으므로 국제 유연탄 시장상황 및 각 사별 수급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매와 공동구매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필요 ○(한전·발전자회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3년간 2.6%의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인데, 이로 인하여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전·발전자회사가 필요이상의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발전자회사) LNG발전소에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LNG 발전소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필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석탄재처리 관련 - 다른 발전자회사와 다르게 남동·남부발전은 석탄재처리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 - 시멘트 원료로 일본에서 오염도가 높은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발전사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 ○(남동발전) 거래업체로부터 불법적인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직원에 대하여는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한 문제 - 뇌물수수로 적발된 직원(해임 1명, 감봉2개월 1명, 견책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1명)에 대한 징계가 경미한 문제 - 위반행위에 따른 합리적인 징계조치를 실시할 필요 ○(동서발전) 동서발전이 '11년에 640억에 인수한 미국 천연가스발전소는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한번도 수익을 거두지 못한 문제 ○(발전자회사)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해외투자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정권의 정책목표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 ○(중부발전, 발전자회사)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이나, 금년 2~4월에 3건의 신입여직원 대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문제 - 전 발전사들이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 ○(발전자회사) 서부발전(190억원), 남동발전(29억원), 동서발전(2억원) 등에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부발전) 중부발전이 매입한 12만 8천평 가량의 토지(매입가 400억원 초과)가 7년간 미활용 중인 문제 - 6개 필지는 미등기 상태로 이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위반 사항임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발전사 퇴직직원 61명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나, 공시는 4명에 불과한바, 공시와 관련한 정부기준 준수 필요 ○(발전자회사) 유연탄 시장에서의 구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전사 전체가 한전·발전자회사 공동의 트레이딩사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발전자회사) 대형 유연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력발전소도 원자력·수력발전소와 같은 사업자 지원사업을 도입할 필요 ○(발전자회사, 남동발전) 발전소 안전관리 관련 -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상태평가(PMS) 시행 결과, 5개 발전자회사의 평가대상 26개 발전소의 58%가 M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문제 -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대상 발전소 5곳 중 4곳이 미흡 또는 불량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5개 발전자회사에서 1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으며, 추락사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다고 있으므로, 관리자들이 현장에 위치하여 안전고리 장착을 확인점검할 필요 - 군산복합화력, 부산복합화력 등에서 철산화 유출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복합화력발전소에 철산화 집진장치를 설치할 필요 ○(발전자회사) RPS의무이행을 위하여 발전사들의 우드펠릿(100%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서부발전) 서부발전을 신뢰하고 러시아 극동 항만 터미널 사업에 투자한 중소기업이 서부발전의 사업철수 결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발전자회사) RPS이행 관련 - 발전자회사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 인증서의 공급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물량이 남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무이행비율 조정이나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 통합 등을 검토할 필요 ○(발전자회사) 단순 하역업무는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5개 발전사가 15년간 하역용역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문제 - 동 계약을 경쟁입찰 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 다시 해당 대기업이 용역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필요 ○(발전자회사)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비 안정성 제고 위해 꾸준한 설비보수 및 투자 필요 ○(발전자회사) 발전사 6직급 직원이 임금, 승진, 사택배정 등에서 다른 직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동서발전, 발전자회사) 지방이전 관련 - 본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동반한 이주계획을 가진 직원이 소수인 문제 - 신규직원 채용 시 해당 지역출신 인재 채용비율이 저조한 문제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방이전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

5. 한국수력원자력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전정책	○원전 발전 단가 및 폐로 필요성 관련 - 안전관리 비용의 상승추세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원가가 석탄 발전원가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전발전 단가를 정확히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고리 1호기의 운영기간을 10년 재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 건설단가 상승, 유럽 수준의 안전규제 강화, 방폐장 건설·송전선로 등의 입지비용 상승으로 원전의 비중은 축소되고 소규모 발전이 확대 될 전망이므로, 장기적인 폐로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원전 사고발생시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비용이 싸지 않고, 폐로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임에도 폐로작업으로 인한 경영손실, 폐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운전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 잦은 고장은 수명이 종료된 노후원전의 폐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주민과의 폐로 약속을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 - 월성 1호기 주설비 교체는 안전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므로 부적절함 - 2017년 고리1호기 폐쇄시 7,75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있다는 보고서(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가 제출된 바, 고리 1호기 해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원전 해체비용 관련 - 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어 현금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적립하고 원전해체 관련 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준비 필요 - IEA의 원전해체비용 산정수준을 감안하여 해체비용을 조정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술연구, 인력양성 강화 관련 - 원전폐로 시장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폐로·해체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교류, 인력양성을 강화하며,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한수원은 핵융합발전 연구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므로, 토륨이나 핵융합발전 등 미래에너지 투자를 실시할 필요 ○ 한수원이 RPS 이행을 위해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산업부와 협의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중국의 원전 증설계획으로 동북아 지역 운영, 건설계획 원전이 2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일 3국간 원전안전을 위한 레짐을 형성하고 산업부 차원의 정부간 협력과 한수원과 민간 운영자간의 협력 강화 필요
원전 안전 운영	○ 월성 3호기 취수구 잠수사 사망사고 관련, 한빛 원전의 유사 사고경험에도 안전망 미설치, 작업 중 취수펌프 작동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규제기관은 정기검사시 직접 입회하여 검사하라는 원안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회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에 피폭량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재관이 직접 입회하도록 개선할 필요 ○ 원전 핵심부품 정비를 위한 예비품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비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 ○ 한울 1,2호기 밀림관 구조건전성평가에서 도출된 열성층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현상관련 후속조치를 20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 ○ 증기발생기 교체 관련 - 균열에 취약한 인코넬 600재질의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관막음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상된 재질의 인코넬 690으로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필요 - 관막음률 증가시에는 주민동의를 얻도록하고, 증기발생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며, 교체실태 자료를 제출할 필요 - 증기발생기 교체 후 폐증기발생기는 관 내부가 방사능에 노출된 것임에도 보관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임시로 보관중인 바, 폐증기발생기 처분기술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 중지로 한수원의 운영손실은 물론, 가구당 10만원의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법인세 납부 감소 등 국고 손실을 초래한 문제 지적 ○ 원전비리에 대한 후속 조치인 비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이 확정액 대비 4%에 불과하므로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100% 수령 필요 ○ 2014년 한울 1,2호기 주증기안전밸브 교체설계 용역시 프랑스 코드를 미국코드로 변경한 것은 안전보다 인허가 편의를 우선한 조치이며, 변경과정에 대한 한수원과 한전기술간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변경원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안전사고 관련 - 폭우로 인한 고리2호기 정지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 등 일벌백계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빛원전에서 신규임용자가 운전을 실시하다가 조작미숙으로 발전이 중단된 사례, 원전 출입자의 방사선량 측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 마련 필요 ○ 방사능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는 고정화를 실시하여 방폐장에 인도해야 하나 고정화의 개념, 절차, 방법,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정립 필요 ○ 갑상선암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원전과의 거리・노출기간・질병의 종류 3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 ○ 원전사고 대비 물품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충하고, 원자력 방호훈련이 도상훈련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상황을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할 필요
원전건설	○ 삼척원전 입지결정 후 주민 지원, 안전성 홍보를 위한 한수원의 역할이 미흡하였으므로 법정 지원사업 외에도 이익금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에 사용할 필요 ○ 신고리 3・4호기가 수출용 원전에 비해 안전계통, 항공기 충돌, 비상발전기, 노심용융 및 냉각 등 분야 품질수준이 낮고, 건설단가도 우리나라(231만원/kw)가 미국(640만원/kw)・프랑스(560만원/kw) 대비 낮아 안전성 우려가 있음 ○ 2014년 삼척원전 신규건설 주민투표 결과 주민 67%가 투표해 그 중 85%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삼척원전 건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2012년 삼척원전 부지선정 당시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주민수용성 확인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주민갈등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부지선정 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
주변지역 협력	○ 섬진강 댐 인근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할 필요 ○ 한울 원전 장기고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소재지는 원전 집적도 및 주민수용성을 감안하여 확정할 필요 ○ 원전 주변지역지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은 지원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건설한 드라마세트장, 회센터, 영어마을 등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 월성원전의 온배수양식장이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래 사업취지를 살리는 개선책 마련 필요
품질검증	○ 신고리 3, 4호기 방사선 감지설비에 부적격 부품을 납품받아 절차를 위반하고 검증비용 부담, 예비부품 구매 등 예산 낭비한 문제 지적 ○ 원전부품 위조사건시 검증업체로 참여하여 책임이 있는 업체가 위조부품의 교체품 검증업체로 다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리검토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원전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용역 사업에 비리전력 업체와 비리사실 전직 직원이 포함되었으므로, 검증을 소홀히 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위조비리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RSCC社가 납품한 케이블 역시 피복이 벗겨지거나 구매규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
계약관리	○ 원전비리경력업체가 회사명만 변경하여 원전안전과 직결된 정비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비협력업체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 - 특히 2007년 방호도장 건 품질서류 위조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제3기관 재검증 인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품질보증실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 필요(자체감사 미흡 시 검찰 고발 필요) ○ 원전비리의 주요원인인 수의계약 비중을 낮출 것을 2012년 기재부와 권익위로부터 권고 받았으나, 2014년 7월 현재 수의계약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출 필요 ○ 원전비리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업체가 다시 비리로 재차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경우 즉시 제한기간을 기산하여 오히려 총 제한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제한 기간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 대규모 입찰비리 직후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입찰비리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계약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 ○ UAE 원전관련 EQ보고서 위조에 참여한 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한수원 사업 계약을 계속 수주토록 하고 있는 문제 지적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압시설 교체사업을 프랑스 아레바社가 낙찰받도록 유도하고 시공토건비 57억원을 중복계산하여 손실을 끼칠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는 문제 지적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공기달성 요구, 추가비용 미지급 및 대가 지연지급,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미적용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협력업체 중 상위 0.09%가 7년간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독점문화와 협력업체와의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전체 산업위 위원에 보고할 필요 ○원안위 전문위원 신분으로 한수원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있어 로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안위 관계자가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방사선 관리용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보안의 핵심업무인 방사선관리업무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어 협력업체 직원이 정직원 대비 피폭량이 8~10배 높음에도 고충처리나 건강에 미치는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관리업무는 정직원이 수행하도록 개선할 필요 ○소수업체의 방사선관리용역 독점, 담합의혹, 용역비용 과다책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근로자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계약을 하지 못한 한빛3발전소 용역업체 직원을 복직시키고, 한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600여개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
경영관리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원전 안전에 대해 한수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 ○ 본사 경주 이전에 따른 사택매입시 할인노력이 부족했고, 사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국토부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했으므로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 ○ 한전, 발전 5개사 및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4직급 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봉제를 운영하고, 내부성과급·기본상여급·자체성과급·경영성과급 등 복잡한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를 확대실시하고 통합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승진을 위한 인사청탁 등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필요

6. 한국가스공사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자원 개발	○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손실을 내고 있는 사업이 많으며, 앞으로도 수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 ○ 캐나다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감사원은 웨스트컷뱅크 매입이 혼리버에 끼워팔기이고, 이미 매입당시에도 순가치가 0보다 낮았다고 지적함 - 8,200억원 투자해서 5,200억원 회계손상 발생함 ○ 캐나다 사업(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에 1조원 정도 투자하여, 5,7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되었으며, 혼리버 추정액이 180억원에 불과하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임 - 캐나다 언컨벤셔널 가스사업은 가스공사 사장이 본부장 시절 기안한 것이므로 책임감 느낄 필요 -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확대정책에 앞장선 것이 에너지 공기업이며, 묻지마 투자로 국민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게 되었음 - 공사의 경영위원회('09.12.15) 및 이사회('09.12.18)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10.2.26)하였으며, 엉터리 경제성 효과분석에 따라 투자승인을 하였고, 많은 이사들이 가격위험을 우려하였지만, 가스비가 당시의 5불에서 10불로 상승한다는 엉터리 분석을 통해 결정함 - 묻지마 추가투자로 필요없는 사업을 인수하고 엔카나 사에 그냥 사업을 맡겼으며, 아무런 관리가 안됨 - 에너지 빈국인 환경에 기대서 묻어가려고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하여 진실규명할 의지가 없고 면죄부를 주고 있으므로 핵심실세를 증인으로 세워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필요 ○ 엔카나사 보유 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당시 자문사 보고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가스공사가 무리하게 지분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투자를 하였고, 가스가격 하락으로 시추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이라크 사업도 현장 작업중단 상태이며, 이라크내전 장기화되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음. 해외투자할 때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된 문제 ○ 이라크 아카스사업 관련, 전쟁·테러에 따른 위험에 대해 보험부보가 되지 않는데, 재산권 담보 방안이 있는지 여부 -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아카스 광구는 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치안 문제가 심각하며, 3개 자치구역으로 분리 시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에서 현지 직원의 납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세일가스의 탐사, 생산 및 도입 관련 - 세일가스 탐사, 생산이 예정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전략을 도출하고, 대상 지역과 규모를 심층 검토할 필요 - 세일가스 반입 예정시기가 2017년인데, 국내 가스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우려도 있음 - 세일가스 반입을 위해서는 에너지터미널 프로젝트도 중요함 - 에너지 수입 물량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며, 세일가스도 북미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므로 대책마련 필요 - 세일가스의 액화, 탐사, 수송사업 등에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세일가스 관련, 석유공사는 개발, 가스공사는 액화, 운송 등 역할분담과 효율적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형 세일가스 모델 개발 필요 ○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드러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목표이자 과제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 - 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천연가스 광구의 가치가 폭락한 문제 ○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6조원인데 비해, 실적은 3조 7천억원에 불과하며, 대규모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 필요 -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부실투자로 부채가 급증하였고, 정권 핵심인사 개입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 -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게이트임 ○ 해외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약 5%에 불과하고, 가스공사는 세계가스업체 중 2013년 128위로 능력이 안되는데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실을 초래한 점이 있으므로, 역량있는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 - 해외 자원개발 분야를 석유공사와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문성도 없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전년대비 투자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업 투자논리와 안맞음 - 공사의 재정건전성과 전문가 활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독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제값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우량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신중을 기할 필요 ○ 탐사사업 중 직접 탐사하는 사업의 비중이 낮은 문제 - 9개 탐사사업에 4천억원 정도 투자하였는데, 운영이나 직원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파견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주업체에 주고 송금만 한 문제 ○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의 실태 및 원인 파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해외사업 인력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산학협력 계획 필요 ○ 해외자원개발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 외국 컨설팅 회사를 철저히 감독할 방안 필요 - 컨설팅 회사에 대한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
천연가스 도입	○ 가스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예선사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독점적 계약과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감사 요구 필요 - 가스공사 임직원이 LNG 도입기지(인천, 평택, 통영, 삼척)에서 예인선 업무를 하는 민간 예선사(한국가스해운, 남성예선, 통영예선, 삼척예선)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독점적 계약에 따라 예선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0~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유착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원감사 요구 필요 - 관료가 공기업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스공사 임직원의 예선사 대표 취임 현황이 과도하므로 시정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예선사 대표 대부분이 가스공사 임직원출신이고, 예선업체 간 지분을 서로 소유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예선업체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 - 가스공사 임직원이 예선사 대표로 가니까 이런 문제를 묵인하게 되는 것임 - 4개 예선사가 예선업무를 독점하고,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음 - 4개 예선사가 교차출자로 독점적 사업 유지 - 예선사 주주현황, 지분구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지난 5년간 가스공사에서 예선업체로 취업한 임직원 현황을 점검할 필요 ○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가 과다하여 스팟(spot) 구매하면서 비용을 20조원 가량 추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발전소 건립, 계절별 수급 변동을 포괄하는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할 필요 - '03~'13년 중 수요예측 오차로 인해 약 20조원의 스팟물량 구매 - 스팟가스 구입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들이 가스공급 신청기한을 잘 준수하지 않는데 가스공사가 이를 명확히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정부는 장기 발전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 ○ 저소득층 난방용 전력 사용 급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5 인수기지 건립 필요 - 제5기지 건립 사전조사 수행 결과 검토 필요 ○ 러시아산 PNG 도입을 위한 협상 진행현황 및 대책 여부 - 서해노선(산둥-인천, 300km)의 경제성평가, 러-중과의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긴밀한 협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여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 ○LNG 구매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민간 발전사, 수입자 입장에서 볼 때,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매우 미흡 - LNG 구매자 협의회 정보공유 관련, 국제 LNG 시장 정보는 국내 민간업체도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임 - LNG 구매자 협의회에 민간업체들을 참여시킨 것은 가스공사가 LNG 수입·판매권의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싸게 수입하는 민간업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스공사가 제대로 할 필요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사업을 실시 중인바, 배선망을 깔았는데도 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공급업체들이 가스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이며, 경제성이 있다고 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가스공급업체들이 가스공급을 거부한 문제 - 가스배관이 되었는데 가스공급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예산 낭비에 대응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1차 미공급사업 관련 소매 도시가스사에 의한 가스공급 지연 또는 미시행에 따른 공사의 손실 추정액 146.9억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이 가스공급을 안하는 것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은 문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자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시설분담금제도를 지역도시가스공급자들이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문제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지역도시가스공급자들의 행태를 행정지도로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자체의 경우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이며, 에너지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가스공사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공급지역 1단계사업 관련 소매배관 건설이 미이행 또는 지연되는 주된 사유는 경제성 결여 문제인데, 정부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 ○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농촌지역에 대해 주민편의 목적으로 도시가스 도입계획을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230개 시·군, '08년부터 '13년에 완료계획)에 수립하였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 - 충북보은, 전남곡성은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15~'16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음 - 에너지복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수급개시일을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감가상각 등 손해가 발생함 - 경제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가스공급 촉진을 위해서 실수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소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 ○ 최근 5년간 도시가스사의 순이익이 2조원을 넘었으나, 비수도권 미공급 지역 잔존 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문제 - 도시가스 요금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이 훨씬 높은 문제 -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여 미공급 문제 해소 필요 - 도시가스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 ○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128억원을 투입하여 자발적으로 가스배관 이설 공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비용은 가스공사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 ○ 제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나, 일부 벽지 산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문제 지속 - 협약 미이행으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등 필요 ○ 시·군 단위로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곳이 많으며 낙후지역에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시 단위도 안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철원 주민 항의가 많음 - 탱크로리로 쓰는 방안 등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을 높일 필요 - 안전관리 부문 중요 ○ 소매 독점구조의 지방 도시가스사업자를 복수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 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 1천억원 규모 주배관공사에 입찰담합이 있었으므로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 - SK, 두산중공업이 담합하여 2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챙김 - 가스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신고를 하면서 보낸 공문은 “참여 업체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증거는 없으나”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상당히 모호한 문제 -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29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최초 예정가격보다 높게 계약하는 등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의혹이 있음 - 공사예정가보다 150% 가량 높은 경우도 있음 -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주배관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여부를 조사 중인데, 자체 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내부감찰이 필요 ○주배관 입찰담합 관련 내부직원 연루 가능성 - 가스공사 직원이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자체 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공사 내부직원 연루가 사실일 경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가스 냉난방기 보급확대 위해 전기보다 비싼 설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 - 가스공사는 가스 냉난방기 보급확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가스 냉난방기보다는 전기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 중이므로, 부처 협의를 통해 전기 냉난방기보다는 가스 냉난방기 보급 확대 쪽으로 통일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 기부금, 해외사업 관련경비, 잘못 계산된 감가상각비 등 4,618억원을 요금에 부당하게 반영했는데 재발방지 방안 필요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시 국내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스비용에 글로벌 사회공헌, 직장운동부 운영 경비 등을 비용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 ○열량범위제에 따라, 가스공사는 열량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스요금이 내려가지 않고 있음 ○전략판단, 국제시세 판단 등 경영전략 실패로 비싸게 가스를 구매하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문제 - 장기계약이 스팟계약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10년도,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12년도 체결된 장기계약은 스팟보다 비싸게 체결되었는데 신중한 계약체결이 필요 - 비싸게 구입하여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 - 사회공헌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 - 자산재평가분, 감가상각비 제외하라고 명시규정이 있는데도 가스 공급비에 반영하는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 기부금, 해외사업 관련 경비, 잘못 계산된 감가상각비 등 4,618억원을 요금에 부당하게 반영했는데 재발방지 방안 필요 ○ 사회복지시설,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보조율 80%, 농어촌마을에 대해서는 50%인데, 열악한 농어촌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서 국비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재무구조 개선	○ 재무건전화를 위해 해외자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연계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가스공사의 자산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자산별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부채가 크게 늘었으나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 인건비 등을 늘리는 문제 - 감사원에서 15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며, 2007년 이후 자산은 12조원에서 43조원으로, 부채 8조원에서 34조원으로 증가 - 경영합리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직원 인건비 등이 증가한 문제 - 1인당 8,054만원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문제 - 좀 더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실적을 보일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가스공사가 대규모 부채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홍보관 등을 만들고 각 관장들 연봉(1억원~1억 2천여 만원)이 지급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 필요 ○ 가스공사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문제 - 부채비율 389%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건실한 회사였으나, 이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투자등급도 내려감 - '12년도에 세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발행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 - 본부장으로 재직시 캐나다 혼리버, 호주 GLNG 사업을 추진한 장석효 사장은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책임이 있음 ○ 영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영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되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꼼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 - 실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으로만 감소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공사의 영구채 발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현 재무현황과 재무개선계획 관련 자사주유동화, 신종자본증권 등은 적정하지 않은 방안임
안전관리 및 경영관리	○ 관로 관리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종합배관망에서 지난 5년간 사고가 없다고 하나 물적 피해가 없었을 뿐, 위험상황은 상존하고 있음 - 비용, 수익성 등을 이유로 안전 관련 규제 완화, 인력 감축 등을 실시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우려 ○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이 중요한데, '12년 4월의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가스배관 관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공사 배관망 사고발생 빈도가 낮으므로 관리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순찰을 줄이고 순찰거리를 늘리는 계획을 세워 시행예정임 -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잘못된 위험도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하며,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배관 관리 인력이나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한국형 화물창(KC-1)이 안전한지 여부 및 특허분쟁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필요 - 미국 셰일가스관련 장기도입 물량수송을 위한 국적선 신규발주분에 KC-1을 탑재 - 신규 LNG선박 발주 척수 6척 중 2척은 KC-1 화물창을 탑재 - 선박 화물창 관련 프랑스 GTT사 특허분쟁 가능성 여부 -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 - LNG 관련 R&D가 미흡 ○ 간부들의 횡령 및 횡령금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비를 사유로 비위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조직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한 문제 - 이라크 법인장의 해외출장비 과도한 지출 문제 - 중국지사는 하는 일 없이 2년간 경비만 19억원을 낭비 ○ 학자금대출 지원 관련,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경우 해당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지원방지협약도 체결되어 있지만, 장학재단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사례 발생 - 가스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 -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처분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내공지 메일로 이중지원 환수메일을 보내고 자료제출을 실시 - 장학재단이 요청한 지원내역 목록을 9차례나 거부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이중지원은 도덕불감증의 증거이며, 서민을 위한 장학재단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내규 개정 필요 ○ 중국지사를 부채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보아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폐쇄한 것은 최근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권위적인 결정으로 보여짐 - 별로 도움이 안될 때 만들었다가 크게 도움이 될만하니까 매각하는 문제 ○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므로 개선노력 필요 ○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하고 있음 - 2013, 2014년 수의계약이 2,822억원 규모이며, 가스기술공사의 낙찰률이 98%에 이르고 있음 - 민간시장이 이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임 - 동화산업이 5년간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 가스공사 연구원은 역량이 부족해 보이며, 이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것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 필요 ○ 세계가스총회 유치와 세계가스연맹 회장 당선은 긍정적인 성과임

7. 한국석유공사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해외유전 개발	○하베스트 NARL 관련, 프로젝트 투자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유가변동 등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결과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음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1조 3000억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비와 추가 비용 중 900억원~1000억원도 못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책임규명이 필요 - 원래 캐나다 회사가 1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현장 확인 없이 이사회 사후 승인 조건부로 매입하였고, 매입 이후 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음 ○하베스트 NARL 매각계약서에 환경복구비용, 임직원 임금정산비용 등 청산비용을 지불한다고 반영되어 있으며,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문제 - 하베스트 인수당시 메릴린치보고서가 인수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메릴린치가 비계량지표에서 엄청 점수를 많이 받아서,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메릴린치가 자문을 담당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문제 ○하베스트 인수당시 자문사 선정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으므로 검찰 수사 필요 - 2008년에 총무비서관 아들이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갔고, 메릴린치의 로비가 통해서 자문사로 선정된 의혹이 있음 ○NARL의 인수와 매각은 에너지 최빈국가인 한국이 겪어야 하는 비애이며,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되어야 하나 전문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유망광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소중한 경험으로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축적할 필요 ㅇ하베스트 투자 및 NARL 매각 관련 투자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의 의혹 및 문제 - 정상적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하류 부문을 매각하게 되었음 -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의 문제임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방향은 공감하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임기 내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공기업을 밀어붙여 막대한 국부 유출을 가져온 것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물어야 함 - 하베스트 인수 부분과 관련, 지분참여해도 되는데 4조원 이상을 들여서 인수한 것은,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의혹이 있음 - NARL의 가치분석도 매릴린치가 용역했는데, 내부수익률(IRR)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문제 - NARL 인수 비용 1조 3천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유지보수로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매각대금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문제 - NARL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으며, 매입사는 고용인 2명만 두고 있는 투자자문회사라는 이야기가 있음 - 하베스트 인수 당시 해외자원개발 정책책임자는 최경환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당시 지식경제부장관), 김영학 현 무역보험공사 사장(당시 지식경제부 2차관),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시 자원개발정책관) 등이었는데, 하베스트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건의 책임은 하베스트 팀장 1개월 감봉에 그친 문제 - 하베스트 인수매각은 하나의 권력형 에너지 비리 게이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 석유공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했던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문제 - 불과 두달만에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인수계약 체결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매우 급하게 투자결정이 이루어짐 - 투명하게 의사결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며, 탐사해서 자원이 안 나오면 그 결과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정이 잘못된 것은 비판받아야 함 ○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하류 부문에 대한 인수를 단 4일만에 결정함 - 상, 하류 부문 전부 손해를 보았으며, 평가손실을 포함하면 1조 5천억원 이상임 - 매각 결정되면 2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본사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 석유공사가 자원을 개발해서 유가안정이나 수급안정에 기여해야 하는데, 설립이후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없고 오히려 위기를 초래한 문제 - 국제 신용평가에서 석유공사가 투자부적격으로 나온 상황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국내 비축기능을 제외하고 조직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직 감축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 하베스트는 석유공사 전액보유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는지 여부 - '09년 1월에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 이를 위배했을 소지 - 대규모 해외사업은 정책실명제를 해서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 ○ 나이지리아 탐사사업 안정화 필요 - 나이지리아 광권무효소송 상고를 했으나, 나이지리아 특성상 상고심은 기약이 없고, 계약만료일은 그 이전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이지리아 사업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정부간 협상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석유공사와 상의해서 정부간 협상으로 돌릴 필요 ○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예산낭비와 사업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정확하게 백서를 만들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 - 2009년 하베스트 인수시에는 셰일가스 요소 제대로 판정 못해 하베스트 하류 부분에서 1조 이상의 손실 발생 - 오일샌드 채취 등에 따라 상류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일은 아님 ○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목표이자 과제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캐나다 주가보다 40% 이상 더 주고 매입함 -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6조원인데 비해, 실적은 3조 7천억원에 불과하며, 대규모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 필요 -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부실투자로 부채가 급증하였고, 정권 핵심인사 개입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 ○ 해외자원개발 관련 컨설팅 과정에서, 자산실사 기간이 매우 짧은 문제가 있었으며, 외국 컨설팅 회사를 철저히 감독할 방안 필요 - 하베스트 사업에 163억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는데, 100% 지분인수라는 큰 거래인데도 자산실사 기간이 11일에 불과하였음. - 컨설팅 회사에 대한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 ○ 이라크 사업에서 철수하고, 콜롬비아 사업과 우즈벡 사업도 철수 예정이며, 10개 중 7개가 이미 사업이 망해서, 세금 3,000억원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은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재산권 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책 강구 필요 - 이라크 쿠르드지역 사업에 대해 재산권 확보, 직원 안전 등 대책을 강구 ○ 하울러 광구 정도만 상업적이라고 판단가능하며 해외자원개발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발언은 잘못임 - MB정부 자원개발 모델로 홍보한 우즈벡 유전의 출장보고서를 보면 양국 정부에 성공을 과시할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뿐으로, 무책임한 보고서임 - 한 건만 크게 성공하면 만회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음 ○ 예멘4광구는 재평가시 사업성이 없어 철회하기로 이사회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업체와 소송단계 중임 - 투자 후 나중에 실사해보니 예멘측 보고와 달랐으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누계를 보면 산출물이 1%로 매우 부실함 ○ 29개 사업에 13조 7천억원을 투자하였는데, 회수율이 6.4%에 불과한 문제. - 해외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했으며, 석유공사의 신용등급도 떨어짐 ○ 10년 동안 2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것은 3건에 불과한 문제 ○ 세일가스 관련, 석유공사는 개발, 가스공사는 액화, 운송 등 역할분담과 효율적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형 세일가스 모델 개발 필요 ○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제값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우량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신중을 기할 필요 ○ 해외자산 매각 추진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석유공사의 자산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자산별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에너지 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에너지 자원의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안보차원에서 소신을 제대로 밝힐 필요 ○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탐사능력 배양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유공사가 높은 점수를 받은 세부항목이 탐사시추 성공률이었는데, 14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석유공사가 직접 하지 않고 외국협력회사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석유공사의 탐사시추성공률은 외국협력회사의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결과임 - 탐사능력배양을 최우선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석유공사가 탐사비중을 높이기는 했지만(19% 수준), 실질적으로는 탐사에 직접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 - 석유공사의 능력은 탐사능력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국제 메이저 회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필요	
오일허브	○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울산 앞바다 기름 유출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 - 석유공사가 주관사로서 주도적 대책 수립 필요 ○ 동북아 울산 허브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여 사업가능성을 보여줄 필요 - 민간자본이 코리아오일 터미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여 사업가능성을 보여줄 필요 - 코리아오일이 공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석유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공사 지분을 30% 이하로 해야 함 - 여수 오일허브사업도 임대수요 60%가 주주사 물량이고 외부물량이 없음 -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이 단순 탱크 임대사업이어서는 안되며, 산업용, 석유상품거래소 신설 등 파생금융상품도 만들어가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므로 석유공사의 계획 필요 - 오일허브사업 추가 투자자 유치 및 안전관련 연구용역 실시등 활성화 방안강구 필요	
알뜰주유소 운영	○ 알뜰주유소 공급 물량에 이익을 많이 붙여 사실상 싸게 공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 - 농협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며,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유시장 과점에 대해서 개선방안 검토할 필요 ○ 알뜰주유소 석유공급자로서, 삼성토탈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 ○ 알뜰주유소 공급업체 선정 관련, 권역별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 선정하고 있어 낙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설정되는 문제 - 알뜰주유소 공급자 선정시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입찰제도 방안강구 필요	
석유정보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거래시 부과금 환급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경영관리	○ 지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였고, 현 정부는 급증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해외자산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필요 ○동반성장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개선 노력 필요 ○상당규모의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직원복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8.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영업·운영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지사만 유일하게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료를 LNG로 전환할 필요 ○ 내구연한이 4~50년인 열배관이 침투수 문제로 인해 20년만에 보수·교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비 54억원 등 모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제습냉방기 크기가 크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시장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현재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열요금이 비싼 지역까지 열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참여 제한 지침을 폐지할 필요 ○ 세대 난방계량기 고장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세대별 계량기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난방계량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획관리	○ 인천종합에너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흑자전환으로 경영 개선이 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상당규모의 상품권 및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과도한 지출을 시정할 필요

9. 대한석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부실경영 관련 - 탄광내 에어쿨링시스템을 한 업체와 14년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한 문제 지적 - 청렴도 조사 결과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재무관리 관련 - 석탄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료 수준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유휴부동산의 적극적인 매각 노력 필요
해외사업	○ 몽골 홋고르 탄광의 투자금 회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안전 및 재해 관리	○ 재해증가 사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 필요 - 광산의 심부화, 설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광산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에 노력할 필요 - 안전장비 1276개 중 32.4%가 C등급 이하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장비 관리를 개선할 필요

10.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부채감축 계획 관련	○ 부채감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재정계획과 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할 필요 - 동, 니켈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을 매각하는 것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되는 등 획일적인 부채감축계획 우려
해외자원 개발사업 전반	○ 해외자원개발 역량의 부족 - 전문성이 낮은 관피아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을 하여 부실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업역량을 보완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은 민간컨소시엄으로 투자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분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여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 필요 ○ 해외자원개발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 운영관리지침에서 50%이상 지분을 획득할 시에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절차적 사항을 철저히 지킬 필요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청문회 필요 ○ 생산단계보다는 탐사와 개발단계에 집중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 자원개발 사업별 문제점	○ 멕시코 볼레오 사업 관련 - 볼레오사업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문제 - 인수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임에도 1조 680억원 가량 추가 투입하고, 국제 자원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 확보 어려워 보이는데도 추가 차입 결정을 하는 등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 볼레오 단일 사업에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공사의 모든 사업이 위축된 실정이고, 원활한 광물자원의 수급까지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남아공 블락플라츠 사업 관련 - 블락플라츠 사업에 대해 외부 기관이 검토한 바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최초보고서의 사업타당성이 왜곡된 것으로 보임 - 남아공 법령으로 인해, 당초 사업하려던 토지 규모만큼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함 - 이사회 승인 이전에 이사회승인 조건부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보고서의 최대치만 보고하는 등 숫자를 부풀리기 하였음 - 관련자들의 징계상황이 경미함 ○ 호주 와이옹 사업 관련 - 호주법원이나 현지 기업도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데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나 투입된 자금의 회수전망이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수과정에서 무등록 로비스트를 이용하였다는 문제 ○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 관련 - FARWEST사(社) 인수당시 내부정부 유출로 인해 고가에 인수하였으므로 투기세력에 대한 검찰수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필리핀 호몬혼 사업 관련 -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 계약을 돌연 파기하여, 크롬광산의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파산하였는데, 이를 공사가 책임질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칠레 엔엑스우노,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사업 관련 - 리튬최대매장지를 광물자원공사가 선점하였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음 - 리튬 2차전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리튬 개발에 다소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볼리비아 리튬배터리용 양극재 생산 R&D사업 관련 - 사업 계약 체결 이후 1년 안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국회에 허위보고하였다는 문제 ○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연탄사업 관련 - 환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320억을 날릴 위기인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국내 사업 관련	○ 도시광산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잠재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폐기물을 주관하여 폐자원을 재활용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폐자원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도시광산기술원을 조속히 설립할 필요 ○ 대한광물 관련 - 광물자원공사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한광물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난 4년간 성과가 없음 - 광물자원공사가 대한광물에 투자한 시점부터 사업계획이 완전 변경되어, 양양철광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 - 대한광물은 희토류가 상당량 매장되어있다 허위로 홍보하여 설립전후 주가가 폭등한 바,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문제 ○ 광산안전교육을 자율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광산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북한자원 개발	○ 북한 광물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필요 - 북한의 광물이 중국에 수출하였다가 한국으로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광물 수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 광물자원 개발계획을 마련할 필요
전략광물 관련	○ 동, 니켈 등 광산물비축에 대하여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 동, 니켈은 광물자원공사가 구입할 경우 보다 값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구조에서는 조달청이 이를 구매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광물자원공사가 동, 니켈을 비축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 미래전략광물로서 토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경영관리	○ 인사채용과정 개선 필요 - 인사채용과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간부직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채용과정에 대한 개선 필요

11. 한국무역보험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국가보안지침 등을 고려하여 도청 보안 대책 마련 필요 ○신입채용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우대방침 마련 필요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공식적이며,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공식 협의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고 민간개방을 시행할 필요 - 민간개방시 4대 대기업 손보사만 혜택(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을 볼 가능성이 높은 문제 - 민간개방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으로 인한 WTO 제소가능성에 대한 검토 실시 필요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무보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이므로 민간개방안을 폐기할 필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문제가 미해결 - 중소기업지원실적은 18%에 그치고 있음 ○단기수출보험의 중소기업 요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요율 할인 검토 필요 ○대기업 조선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소조선사 손실로 보고함에 따른 오해 발생 소지가 있다는 문제 ○중소기업 지원 목표 대비 실적 미달성이 예상되며,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연말까지 목표실적 달성 미흡으로 판단(중소중견기업 40조원 지원 목표) ○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기금건전성, 리스크·채권 관리	○ 기금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기금운용배수가 선진국 등의 무역보험기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책임성 있는 조치 필요 - 추가 출연 또는 당기순손실 감소 필요 ○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회수채권 회수 대행사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실적 제고 필요 ○ 미회수채권 규모와 회수실적을 볼 때, 보험 심사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회수불가능채권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 배수 악화도 발생 - 인수심사시, 위원회가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리스크관리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 ○ 서류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채권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관계 기관과 협력한 재산조사, 은닉재산 회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 환변동보험 거액 미환수금 회수 대책 마련 필요 - 환변동보험 미환수금 충당률이 99.94%로 대부분 미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한 채무자 정보 파악 등을 철저히 할 필요
개별 보험 상품 관련	○ 환변동보험 확대방안 마련 필요 - 엔저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환변동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대책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수출보증보험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저조 문제
기타	○ Credit Line 등 신규 기법 등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 강화 필요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금운용사에 자금운용을 위탁하였는지 여부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 해외조직망 관리 - 1인 무역관에서 지난 1년간 6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에볼라 확산 위험지역 무역관의 안전매뉴얼 등이 부실하므로, 귀국조치 등 안전대책 강화 필요 ○ 국가보안지침 등을 고려하여 도청 보안 대책 마련 필요 ○ 해외무역관 감사 시, 열악한 신흥국 무역관에 대한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 수요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여 신흥국 위주의 무역관 개설 필요 ○ 신입채용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우대방침 마련 필요 ○ 킨텍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상법상 기준과 상이한 정관의 의결정족수 개정 필요
중소·중견 기업지원	○ 지방지원단의 현재 센터와 직원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단 확대를 검토할 필요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시,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지원할 필요 ○ 국정과제인 대기업-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적을 제고할 필요 ○ 해외전시회의 한국관 구성시, KOTRA와 aT가 각각 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수입자 신용카드 거래시스템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제고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역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제고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수출지원센터 직원 1인당 지원업체 수가 과다하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검토할 필요 ○마케팅 위주가 아닌 R&D 지원 등 내실있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정책이 필요 ○수출전문위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바, 처우 개선 검토 필요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과 제고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일괄지원 프로세스 검토 필요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강화 및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필요 ○해양플랜트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관련 세부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정부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 ○수출첫걸음 사업 추진시, 수출실적이 나올 만한 대상기업만을 지원하므로 기타 기업의 불만이 있고, 1년 지원 이후 추가 지원이 없으므로 시간적 고려가 필요 ○해외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aT 등과의 협업 강화 필요 ○부처별로 산재한 수출 관련 사업의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해외진출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정보조사 및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비관세장벽 정보를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해외투자	제공할 필요 ○ IP-Desk 사업이 특허청에서 KOTRA로 일원화되었으므로, 예산도 직접 KOTRA로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 해외진출기업의 애로개선 실적이 낮으며, 특히 법률 관련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해외 투자유치	○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편중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M&A형 투자유치 및 현황 정보 등에 대하여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필요 ○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하므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투자협약 중 실제 투자가 도착된 건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도착 중심의 실적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순방시 공표하는 유치성과와 실제 실적간의 괴리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외국인투자유치실적 통계를 '도착' 기준으로 전환하여 보고할 필요
기타	○ K-Move 담당 직원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 안정성 등이 미흡하므로, 전문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파견 직원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운영 책임성 및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U-턴기업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U-턴 실적이 부진한바, 근본 이유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내전시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기업 출자회사 감독강화와 감사원의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필요 지적에 따라, KOTRA 출자회사인 벡스코의 매각계획 수립 필요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SK 건설이 울진군에 설치하기로 한 '핵폐기물연구시설'은 총 사업비 규모로 볼 때 '핵폐기물처분시설'이 될 우려가 있는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참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면 산업부와 협의하여 SK 건설 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벨기에에서 토륨을 이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연구 중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권고 및 부지선정 이전에 시일이 걸리므로 개념 및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준비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
중·저준위 처분시설	○중·저준위 방폐장이 단층 위에 건설되었다는 보도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언론에 대해 중재신청 등 적극 대응할 필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사고 대비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례 훈련을 실시할 필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연내 1,000드럼 더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빛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이므로 조속히 해결할 필요 ○2013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에 구멍이 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2004년 이전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를 실시할 필요 ○2009년 도입한 해상운반선의 운영실적이 2010년 1,000드럼 운반이 전부인데 운영비용은 연간 20억원에 이르고, 운영인력도 20여명이어서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방폐장에 대한 품질 안전 강화를 위해 기자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 - 방폐물의 전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이력관리체계(WCP) 도입을 위한 후속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경우에도 처분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경영관리	○방폐기금관리센터 관련 - 원자력환경공단 소속 기금관리센터가 방폐기금 운용을 이유로 하여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문제 - 서울 잔류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금관리센터의 본사 이전이 필요

14.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금지원	○ 융자 결정시, 담보력이 아닌 기술성과 사업성에 기반한 기업평가 필요 ○ 정책자금 개선방안 마련 - 수요에 맞는 정책자금 확충 필요 -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자금 공급 필요 - 담보부대출 비율 낮추는 노력 필요 - 창업기업 및 서비스산업군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간의 중복 지원 개선 필요 ○ 지역별 예산 배정시, 지역별 편차 시정 필요 ○ 정책자금 성과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 ○ 부실채권 최소화를 위한 사후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기타	○ 외국전문인력채용사업, 유용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 폐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확대 필요 -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추진 및 정부 매칭펀드 도입 등 검토 필요 ○ 충청권 연수원 건립을 위한 2015년도 예산 확보 필요

15.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단지 안전관리	○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점검이후에도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 ○ 안전사고가 주로 화학업체와 안전시설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진행된 영세업체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안전지원 대책이 필요 ○ 전체 산업단지 수에 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산업단지 수가 매우 적으며 진단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도 부족 -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도 부족 ○ 안전에 대한 진단권한이 개별법에 의한 개별기관별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선이 힘듦에 따라 관리체계(거버넌스)조정 필요 -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가 필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공단의 산단 안전관리 기능이 지도 및 교육 외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단 내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권한과 책임 간에 부조화가 발생 ○ 재난관리책임기관임에도 실제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재난대응매뉴얼도 부실한 상황이며, 점검 실적 자료도 부실하는 등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역할이 매우 미흡 - 재난유형 7가지로 세분화, 매뉴얼 내용이 유형구분과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단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 - 안전관리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집 통학으로 인해 교통체증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셔틀버스 운영 검토가 필요 ○ 과거와 변화된 기후여건에 대비해 노후화 된 우배수관 점검 등 인프라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합동방재센터 관련, - 현재 설치된 6개의 합동방재센터로는 전국 산업단지를 관할하기에는 부족하며, 중부내륙 지역 등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 합동방재센터의 책임성 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근 소방서 활용 또는 산단공이 군 출신 화학장교 등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합동방재센터의 근접지역 위주의 활동으로 관할내 신속한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발생하며, 합동근무에 따른 지휘체계 불명확 및 책임성 미흡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13년과 '14년 대비시 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되었음에도 사고는 전혀 줄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방 효과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산단에 대한 안전시스템도 구축할 필요 ○ 노후산단 안전관리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 외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안전예산 확보가 필요 ○ 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실질업무가 행정지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전문 안전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안전 및 재난관리를 예방단계, 대응 및 진압단계, 복구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
노후 산업단지 혁신 (구조고도화 사업)	○ 2013년도 완료예정이었던 구조고도화사업이 현재에도 추진중이고, 사업효과도 미진한 것으로 평가 ○ 노후산단 혁신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차이점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단에 대해서 반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 신규산단 조성 예산에 막대한 금액되나 미분양이 큰 반면, 노후산단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문제 ○ 산단 내 네트워크, 산단 간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혁신을 이룩할 필요 - 구조고도화사업이 하드웨어 개선에 치중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플랫폼을 우선 개선할 필요 - 중국의 샤오미,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 ○ 부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융복합 집적지 조성, 지식기반산업 준비를 위한 혁신산단 지정이 필요하며, 도심형 산단의 특징이 반영된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 ○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을 통한 기업의 부동산 투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 - 구미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신청기업인 KEC의 사업추진 의도에 대한 검토 필요 ○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분양가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단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제 ○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할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대표적 화학공단인 울산 미포산단, 온산산단 등의 노후화 문제 및 안전관리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열악한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지방산단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 ○ 도시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	○ 산업용지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수준이 불법매매에 따른 부당이득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탈세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산업단지관련 개발은 국토부,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산업단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예측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부동산투기에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조성 및 공급이 필요 ○ 수요자 맞춤형을 통한 산업단지 적기 공급이 필요 ○ 원주문막 산단 등 미분양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등 미분양 해소방안이 필요 ○ 산단공의 일반산단 공급 시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공급시기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 관련 기관간 협의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정책적 추진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서울디지털단지 마리오아울렛과 공단 간의 법정소송 1,2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서 모두 공단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리오아울렛의 반고용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 - 마리오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및 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조사 필요 ○ 서울디지털단지 마리오아울렛 입주로 인해 발생한 인근 지역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서울시 및 구로구청과의 협의 등을 통한 개선 대책이 필요 ○ 울산테크노산단이 친환경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의 계획반영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임대료 인상률 등 임대료 관련 통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필요 ○ 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미분양 사태, 노후산단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고 제출할 필요
기관운영	○ 산업단지공단의 타 기관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지역본부별 구성비율 편차 등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본사의 지방이전 후 현지기업의 활용과 인력 채용 등 지역 상생발전 및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법인카드 과다보유, 심야사용 및 승인취소 등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

16.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 119' 어플리케이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다중이용시설 중 영업 시작 전에 전기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영업하는 업소가 많은 문제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필증'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 ○ 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 ○ 송·변전 및 배전설비 검사제도 관련 - 한전이 소유·운영 중인 송·변전, 배전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가 검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양질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수립 검토 필요 ○ 가로등 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과태료 부과 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점검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가로등 안전관리 관련 - 미개수 가로등·보안등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가로등 감전방지를 위한 특허품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불량 가로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하도록 안전공사가 노력할 필요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불량 전기 시설물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등이 필요 ○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부재로 인하여 민간 대행업자의 덤핑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수립 필요 ○ 안전관리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유지·채용이 필요한데 충원요청 인원(233명)에 비하여 실제 채용인원(39명)이 지나치게 적어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문제 - 1인당 평균 검사·점검량이 과다(검사직 1인당 770건, 점검직 1인당 10,638건)한 문제 ○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캠핑카 내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련 - 민간 설비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기설비가 안전점검 불합격판정 시 시설개선 비율이 훨씬 낮은 문제(민간 80.8%, 지자체 59%) -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에 공사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 - 안전점검 불합격설비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관련 - RPS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A업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체의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필증을 교부한 문제 - '09년 10월 특정감사결과 불합격 설비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교부한 사례가 22건에 달하고 있는 문제 - 1인 검사 방식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대책 수립 필요 ○ 정확한 전기재해통계 작성 필요 - 원인미상으로 처리되는 통계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 - 통계작성 시 임의적인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나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세밀한 통계작성 필요
취약계층 지원	○ 전통시장 등 취약장소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어린이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 전기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 - 어린이 인형극의 경우 전체 대상 중 0.3%만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의 혜택은 저조한 문제
경영관리 및 기타사항	○ 관공서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 단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외 전기설비 수주 실적 증가 대비 수주액 증가가 부진하므로 해외 전기안전 홍보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 ○ 비상발전기 사업 관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4년 예산으로 12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없이 국회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문제 -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비상발전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력 피크타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사의 비상임이사 등을 채용함에 있어 낙하산인사로 채우는 관행 근절 필요 ○ 본사 지방이전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품구입·직원채용 등에서 현지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전기안전공사의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사옥 마련 등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제고를 도모할 필요 ○ 허위실적 보고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엄중한 신상필벌 필요 - 현장조사 없이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직원에 대하여 두 번의 모범직원 표창을 한 문제 ○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법정 안전점검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인력과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

17.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가스 안전관리	○노후 LPG 용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현재 시중 유통되는 LPG 용기 중 20년 이상 노후용기가 절반 정도 - 노후 LPG 용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 용기 사용연한 제를 시행 중인데, 불량용기가 유통되고 있음 - LPG 용기 교체시 소비자에게 용기 교체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강화와 불법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사용연한제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단계적 폐기해야 한다는 보고서 및 업계의 목소리 많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량 폐기를 결정함 - 용기이력관리제를 적극 실시할 필요 ○LPG 가스통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 - 불법행위 사업자가 지난 1~9월간 138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형 폭발사고 위험이 있음 ○불법 수입되고 있는 LPG 용기 세관장 확인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 - 일회용 LPG 용기의 불법 유통으로 사고 빈발. 13일 LPG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 사고 발생 - 1회용 LPG 용기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으나, 신고건수는 86건에 불과 - 업체가 부담하는 경비로 하는 해외출장검사의 실효성은 낮으므로 세관장 확인제도를 활용할 필요 ○수입 LPG 용기에 제조회사만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용기를 봐서는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세부적으로 기록되도록 할 필요 ○최근 LPG 사고의 중요한 사고원인이 불법 LPG 용기이므로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미검사 용기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용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벌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법수입 LPG용기 충전제품의 인터넷 유통 근절 대책 필요 ○ 폐용기에 각인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치 필요 ○ 가스관 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 - 노후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필요 ○ 가스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한국형 IMP 제도 도입 필요 - 중저압 배관 3만 8천 km의 24.5%가 노후화 - 고압 배관 3,500km 48%가 인구밀접지역에 있으며, 59.4%가 노후화 - 현 진단 방식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가스연소기 안전검사가 KS만 받으면 끝나고 있어 안전관리 미흡한 문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모든 검사가 면제 - KS 검사기관 자체가 제조사 단체이며, 제조사에서 안전검사하고 있음 -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형식승인을 맡고 있는데, 관리감독 대상 기관이 아닌 상태이므로,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만들 필요 ○ 민간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가스폭발위험 검사는 63개 민간 가스점검기관에서 6초에 한 대씩 검사하고 있음 - 10년전 시험성적서도 눈 감아 주고 있음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가스검사 시 공사 검사보다 민간검사의 지적 확률 너무 낮은 문제 ○ 부탄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장치 방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입할 필요 - LPG 사고의 24%가 부탄캔 사고 -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7/22일 설명회 개최하였는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장치 부탄캔의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 결론이나 2차 사고 위험도 지적 - 업계 1위 업체가 미국 수출시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국내판매시에는 안 하고 있음 - 안전장치가 완벽하다는 것에는 기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우선적으로 안전장치 방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빨리 도입할 필요 ○ 배관에 대한 일정주기 검사가 있으나, 주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성가스 대책으로 검인증제도 도입 필요 ○ 독성가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독성가스 안전사고가 연평균 45% 증가 - 암모니아, 염소 등이 많으며, 단순 누출사고, 취급 부주의가 늘어남 - 독성가스 사용용기를 6개월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송해야 하나 반송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음 ○ 캠핑카에 대한 가스안전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캠핑카에 대한 가스안전 시설기준이 없는 문제 - 푸드트럭에는 완성검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캠핑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검사가 안되고 있음 ○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넘어간 후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전통시장 등 취약 장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정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LPG 금속배관 교체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필요 - 2013년 전체 가스사고의 70%가 LPG 사고이었으며,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요구 가구수가 크게 증가함 - 2009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속배관 사용이 의무화되어, 2016년부터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음 - 실질적인 서민층이 2배 이상 비싼 LPG 사용하고 있고, 고무배관을 설치한 가구가 공사 추산 260만 가구인데, 공사가 내년 말까지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 66만 가구로 계획되어 있어, 후년부터 200만 가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 -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말까지 대상가구수 전부 교체 하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대안을 마련할 필요 ○ 5개 도시가스사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미신고 굴착공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1부처 1해외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 목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안전, 예방 사업에 좀 더 집중할 필요 ○ 민간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간의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 -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관리·운영	○ 재난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안전인력충원 신청을 하였으나,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된 문제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국민안전과 직결되므로 인력충원 필요 ○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투명성 제고 필요 - 국민 권익위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임 투명성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문제 ○ 국외출장 검사할 때, 소요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문제 - 출장검사 소요비용까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식비, 숙박비, 항공비 업체가 부담하며, 현장에서 입금되는 사례가 있음 - 해외기준과의 통일성과 국내/국외 형평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비상임이사가 윤리경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 고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 필요

18. 에너지관리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결제시스템, 콜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이 '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농어촌지역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아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농어촌 거주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규모 조정작업 등 에너지바우처 운영과정에서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목표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향할 필요 ○ RPS 제도 관련 - RPS제도의 REC가 전년도 발전량에도 인정되는 등 발급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선 요구 - 전년도 발전량에도 REC를 인정하고, 정부보유 REC 물량을 한번에 시장에 내놓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현 제도 운영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RPS와 REC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노인시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과의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역별 지원 보조금 규모에 대한 조정 필요 ○ 태양광 사업 관련 - 태양광대여사업을 통한 REP를 비태양광 실적으로 인정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함에 따라 태양광 보급확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목표는 2000가구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28%인 560가구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태양광 폐기모듈 파악 및 관리 필요 ○ 지열이용검토 관련 - 지열이용 검토서 민원 처리기한을 경과한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공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침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지침을 개정할 필요 - 지열이용검토서 심의위원에 비리 전력자, 비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등 인력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 교육기관 LED 보급을 확대할 필요 - 초·중·고교 대상 LED보급률이 저조하므로, 교육기관의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 - 교육기관의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되,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관련 - 전문가에 의하면 EMS의 에너지절감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설비 가격이 비싸서 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이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EMS의 보급을 권장하는 정책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EMS의 국산화율이 10%도 안되므로 국산화율을 제고할 필요 ○ 열병합발전소 건설 인허가 후 수급업체의 동의 없이 타 건설업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프리미엄이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오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 국내 열사용기자재에 비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의 불량률이 높으므로, 해외 현장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대상품목에 대한 샘플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개선 필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징벌적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기관 운영	○ 기존 부지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울산 지역주민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속히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울산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

19. 한국광해관리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광해방지 사업	○광해방지사업이 미흡하므로 개선책 마련 필요 - 당초 음성꽃동네가 부탁한 바에 따라, 음성 꽃동네 지반침하 현장을 지반침하에 대한 환경 교육 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필요 - 지반침하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환경부 폐광산 주변지역 사후 환경요염영향조사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곳 중에도 상당수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광해방지사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 - 토양복원사업이 완료된 토양의 중금속 오염, 94억원을 투자했으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지장천 수질정화사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광해방지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정선 지장천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오염원인인 폐석장에 대해 광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백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폐석장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광해방지사업에서누락한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필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광해사업본부장, 본사 해당사업 부서의장 등이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바, 광해관리공단의 연도별 공사 설계변경비율이 매년 58%에 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변경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유통된 경위나, 유통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관리가 미흡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폐광산 수질 오염이 심각하나,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147개 광산 중 40여개에 불과하므로, 광해방지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해외 광해방지 사업	○ 지장천 백화현상 등 국내 광해방지사업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하였으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이 저조하므로, 무리한 해외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해외 광해방지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할 필요
출자 회사 관련	○ 출자회사의 적자누적 관련 - 출자회사 누적적자 개선 필요 -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출자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중소출자회사는 모두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바 있는데, 공단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필요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인 강원랜드의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 집행액의 77% 이상을 강원도에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적으로 시행할 필요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 지원	○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 신청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재조정 필요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대한석탄공사의 산재보험료, 탄광근로자 및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지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지원 업종이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폐광지역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으므로,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

20. 한국석유관리원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석유 유통관리	○가짜석유 근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장치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취소 혹은 재검토할 필요 - POS 설치실적이 전체 주유소 중 30%(미들웨어 포함 15%)에 불과. 신규신청 668업소 중 309업소는 취소·보류함 - 현장에서는 전산보다 수기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사업 낙찰받은 업체가 POS 생산하던 업체가 아니며, 조립품으로 납품함 - 저조한 설치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규설치를 위한 약 29억원의 예산 신청은 부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 ○가짜 석유제품 적발을 위해 주유소의 월별 보고를 주간 보고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주유소 협회가 파업을 중단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당초 석유관리원의 포스 단말기 보급사업을 협회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임 - 정부,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가 주유소를 볼모로 사용한 측면이 있음 - 주간보고 방식을 보면, 전자식 66.7%, 포스 방식 7.8%, 수기 26.5%로, 포스 방식의 보고 비율이 너무 낮음 ○가짜석유 신고-적발-판정까지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가짜석유가 판매·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요시간을 단축할 필요 ○품질관리, 유통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량유지 등에 대한 특별한 단속·관리 필요 - 가짜석유는 음성적 거래로 시민의 안전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단속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검거인원과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 ○ 가짜 휘발유 문제는 다소 해결됐으나, 가짜 경유 거래 증가 문제가 있으므로 집중 단속할 필요 - 가짜경유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폭발사고 등 위험도가 높음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 ○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연계한 단속강화 조치 마련 필요 ○ 대형사용처에서의 가짜석유 적발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용처 대상 가짜석유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도입 업소 중 가짜석유 적발, 품질부적합 등으로 18업소가 협약취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업소의 가짜석유 적발률이 0.3%에 달하는데, 0%가 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도입 후 가짜석유 적발, 품질부적합 등 18업소가 협약취소 되었는데, 가짜석유 취급업자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 ○ 가짜석유 근절이 안되고 있으므로, 몇가지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전산시스템 확보가 전체 업소의 10% 조금 넘는 1,800개 업소에 불과하므로, 시행령이나 법률개정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용제는 관리가 되나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소관이어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 필요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가짜석유 단속 위해 노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가짜석유 단속-처벌-폐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가짜석유 미처리 분량이 많으므로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환경공단이 폐기물을 맡고 있으나 포화상태라 하여 폐기 안된 것들이 재유통 될 우려가 있음 - 단속, 압수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이, 보관, 폐기는 환경공단과 정유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가짜석유 폐해 방지를 위해 석유제품 품질·유통 관련 지도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가짜석유 관련 시장규모가 연간 2~3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 가짜석유로 시민불편 및 탈세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최근 검사실적이 감소하는 문제 ○ 유조차 봉인 규제 필요성 및 관련 통계를 검토할 필요 - '10년 부천 외곽순환도로 화재사고의 원인은 유조차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기인 - 미군 부대에 납품하는 유조차는 봉인하고 있음 ○ 일부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으므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이 현장실사 업무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하는 폴주유소의 브랜드에서 비정상제품이 불법판매되고 있고, 단속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휘발유 성능평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관리·운영	○ 단속정보 제공 및 향응이나 대가 수수 등 비위 사실이 다수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짜석유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가짜석유 단속권한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고 석유관리원은 시료분석만 담당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할 필요 - 직원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비리 유형도 다양화되어 공적 임무 수행에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있음

21. 한국전력거래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력시장 운영	○ 현행 변동비반영(CBP)시장 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요관리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요관리사업 초기시장 형성과정에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원자력 정산단가 산정 관련 - 원전비리 발생에 대한 조치로 '13년에는 원자력 정산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으나, 원전이 정상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4년에 지나치게 높은 정산단가를 산정하고 있는 문제 ○ 용량정산금(CP) 관련 - 용량정산금의 취지는 발전소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전력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은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이 234억원 발생한 것은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 다르다는 문제 - 발전소의 노후정도, 가동 참여도 등 합리적인 비례산식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 필요 ○ 계통한계가격(SMP) 산정 관련 - 전력거래소가 계통한계가격 산정 시 연료비 정산단가(평균비용)를 사용하지 않고 발전기동계획프로그램(RSC)의 결과값을 미분함수식에 사용함에 따라 '13년 평균 정산단가가 kW당 3.94원 높게 책정되었고 이에 2조원 가량의 과다정산금이 유발된 문제 - 2조원의 대부분은 발전자회사의 보정계수 적용으로 조정이 되었으나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발전사에게는 5,347억원 가량이 실제로 과다정산된 문제 - 전력비용 과다정산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전력계통 운영	○ 비계획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분 관련 - 발전기가 고장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분이 매년 발생하여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력거래소의 각 발전사에 대한 전력판매 손실분에 대한 변제금 상환 노력이 부족한 문제 - '04~'14년 고장, 수리로 발전기 정지(약 2만 시간)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이 약 3,300억원에 달하는 문제 -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력거래소가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자 비용평가 운영규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신설된 전력판매 손실금 배상조항에도 고장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배상 청구할 수 없고, 비리 등 비정상적인 정지사유에만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기 정지로 인한 거래단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 발전기 고장정지 관련 - '07년 이후 발전기 고장률이 발전자회사는 2배, 민간발전사는 3배나 증가하고 있는 문제 - 원자력, 석탄, 유류발전기는 고장률이 감소했지만 가스(LNG) 발전기만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설비결함 및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별 발전사의 고장감소 노력이 필요 ○ 서울 관제센터 관련 - 단일계통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급전소를 3개씩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없음에도 나주로 중앙급전센터를 이전하는 전력거래소가 서울급전소를 불필요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문제 - 전력거래소는 나주 이전 시 급전원의 수도권 날씨변화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 계통운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급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급전센터가 무너지면 전국의 모든 발전기가 정지되므로 수도권만 따로 계통운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 - 전력거래소의 불필요한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 ○ 현재 5일 이상의 고장에 대하여만 사고조사를 하고 있어 사고발생건수(208건)에 비하여 조사건수(27건)가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고장일수와 무관하게 고장건수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할 필요 ○ 현재 GDP,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그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빅데이터·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하여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력수요를 감소시킴으로서 (첨두부하)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줄일 필요
계통운영 시스템(EMS)	○ 차세대EMS가 자동발전제어신호를 제대로 내보내지 않고 있으며, 자동발전제어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발전기가 있어 EMS를 통한 주파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 차세대EMS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필요 - 차세대EMS의 정상적 운영여부에 대해 해외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조사가 필요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지역산업육성 및 혁신지원	○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은 기반구축과 연구개발로 지원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에서 기반구축사업이 실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등 두 지원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율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조선해양분야의 시험인증 등에 대한 기반구축이 미흡하여 조선해양분야의 기업은 시험인증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산업육사업 예산이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의 확대를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원예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서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 전망에 비해 인력양성이 부족하므로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장비구입 중 외국산 장비가 60%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산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산장비구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비 및 재료비 구입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 기술거래 및 평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술사업화가 미진하므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가 칸막이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 내부규정에 의해 승인인사 발령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정방안 마련 필요 ○ 경영실적보고서의 인건비를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르게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대책 강구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중요하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 필요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정책기획	○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국내시험인증시장의 25%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달물품 검사규정 미준수 및 처리절차 부적정, 시험성적서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중대형 이차전지에 대한 국내시험인증기반은 거의 없어 안전성 검증문제, 국내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 절차의 복잡성 및 업무처리 공정성, 소요비용 과다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어 외화 유출, 우수한 신기술과 시제품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기 해외인증 업무 협약을 강화하는 등 개선 필요
경영기획	○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등으로 시험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시험인증 부실로 업무정지를 받는 것은 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인사관리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 필요 ○ 비정규직의 비율이 52%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력구조를 개선 필요 ○ 시험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강구 필요

24.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디자인전문인력 파견 확대 필요 ○ 디자인 R&D 융합 관련하여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과 경쟁력이 낮아 성과가 미흡하므로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우수디자인해외진출사업은 국가 브랜드 제고 보다는 중소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필요
해외사무소 운영	○ 중국 북경에 1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디자인기반 조성	○ 창조경제시대에서 디자인산업 육성과 글로벌시장 개척이 중요하므로 디자인을 통해 명품화 및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디자인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원지역 디자인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세계적인 한국 스타디자이너와 차별화된 한국특성을 지닌 디자인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디자인정책 공감·동행포럼에서 제안된 정책이슈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업무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 '14년 상반기 인력채용시 지역인재 법정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임대료와 관리비 책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관리가 공정성과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관리비 책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마련 필요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R&D 평가관리	○R&D 과제의 사업화가 낮으므로 R&D 사업화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선 필요 ○R&D 과제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R&D 성과 검증 데이터 검증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회계)의 검증 및 성과지표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가 R&D 과제를 추진하면서 장비구입을 할 때 외국산 장비 구입이 60%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산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산 장비구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R&D 사후관리	○1인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관리가 200개가 넘어 제대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정밀실태조사가 되지 못하므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필요 ○연구비의 유용, 횡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비의 유용, 횡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납품거래 공모 등 연구비 부정사용방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실적에서 자체 적발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부도나 폐업으로 환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비 및 재료비 구입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연구비 유용을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방지하기 위해 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국가 R&D에 대한 성과를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명의 출원자에 대한 참여제한을 하는 등 제재방안 강구 필요
개별사업 및 기관경영	○ 공공기관의 청렴도조사 결과에서 준정부기관 중 85위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사업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10대 핵심소재사업(WPM)에서의 민간매칭비율이 당초 계획했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 필요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연구개발 (R&D)	○ ’13년 기초전력연구원으로부터 기초전력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이관 받았으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

27.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평가 실적 제고 필요	○ 최근 경영평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징계양정 기준 강화 필요	○ 비리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운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비정규직 축소 및 처우 개선 필요
사업성과관리	○온라인 구매지원 시스템 운영실적이 동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료 충당 실적에 부족한 상황
	○R&D 지원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R&D지원사업의 효과, 매출액 증가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업화 효과 미미하며, R&D 과제 선정이 단기성과 위주임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담지도직 처우개선	○ 상담지도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예산반영 요구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소상공인 조직화 및 공동화	○ 부가서비스·사후관리 등 실효성 있는 나들가게 운영지원 필요 ○ 다양한 상품공급 및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시장경영 혁신지원	○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제고 ○ 온누리상품권 및 전자상품권의 판매 확대 및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필요

30. 한국전력기술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전 등 안전관리	○ 원자력발전소 화재 시에 나오는 다중 오작동에 대해서 한국전력기술이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문제 - 원전 안전강화를 위하여 다중 오작동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기술개발 및 기술보안	○ 기술개발 예산 관련 - 미래선도·신성장을 위한 플랜트 4대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술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 9,400여 억 원의 6.5%인 621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문제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국가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예산편성 필요 -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IGCC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기술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무단 유출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 필요 - 퇴직직원의 기술자료 유출, 협력업체 직원의 자료 유출 등 관리 부실사례가 많은 문제

31. 한국원자력연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품질관리	○ 2011년 원자력발전 연료봉 불량품 4,700개가 발생하여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연료봉 상단고정체 고유코드 오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핵연료를 독점공급하는데 따른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 대전 제3핵연료 가공공장 증설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32. 한전KPS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한전KPS	○ 월성3호기 취수구 사망사건 관련 - 근거리(1.5m)에서 가동 중인 취수펌프를 꺼달라는 작업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펌프를 계속 가동하여 사고를 유발한 문제 - 한전KPS가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 - 시신수습 등 사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소수의 기업만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다른 일반 기업들에 있어서 협력업체 등록에 인색한 문제 - 한전·한수원 및 발전5개사가 발전, 송·변전설비 정비 분야에서 한전KPS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할 필요 ○ 발전자회사의 발주량('13년 약 7,000억원 규모) 대부분을 한전KPS를 포함한 6개 민간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문제 - '02년부터 시행한 민간 정비업체 육성정책이 특정업체의 특혜로 작용한 문제 - 전기공사업계의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업체를 지정·육성해서 업계 전체적인 경쟁체제를 확대시킬 필요 ○ 한전KPS의 해외진출 역량 확대 필요 - KPS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1조 1258억 원 가운데 국내에서 얻어낸 것이 91.8%고 해외부문은 8.2%에 불과한 문제 - 한전KPS는 해외로 진출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전체적인 정비역량을 강화할 필요

33. 한전KDN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한전KDN	○ 한전과의 수의계약이 기관 매출액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 '13년 한전과의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용역 및 물품구매 사업이 1,052억원에 달하고 있는 문제 - 한전과 수의계약한 공사용역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주고 있는 등 기관 자체적인 경쟁력이 부재한 문제 ○ 납품계약관리 관련 - 7년간 한전KDN이 배전운영상황판 물품구매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짧은 납품기일 등으로 313억원을 2개의 특정업체에게 몰아준 의혹 - 이와 관련하여 2개 업체 중 한 업체의 한전 및 한전KDN에 대한 납품비리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전KDN은 국회에 "감사원 감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납품비리는 없었다며 국회에 허위 보고한 문제 - 한전KDN 납품비리 근절 등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 ○ 하도급 제한 관련 - 하도급비율을 제한하는 법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80~90% 수준의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 한전KDN은 대규모의 추가인력 고용과 설비 구축이 불가피한 문제 - 한전KDN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조직 안정화 대책 강구 필요

34. 한국가스기술공사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관리·운영	○임원진이 전문성 위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임원진 전원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건 문제가 있음 - 상임이사 선임시 가스분야 전문성을 고려하고, 공석인 기술사업본부장 조기선임 필요 ○전(前) 임원의 자녀 특혜채용 개선 필요 - 전임직원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문제 - 파견직 근로자 형태로 채용되었으며, 파견근로자 고용이 승계되는 문제가 있음 - 파견직과 계약직으로 변경고용하면서 경력세탁 의혹 야기 - 직원명단 누락하여 제출 - 조직 내부 체계 기강이 없는 문제 ○가스검출기 국산구입 확대 필요 - 가스검출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구입하고 있음 - 민간에서는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스검출기에 대해 적극적인 국산 사용 필요 ○지사장의 처가 소속된 보험대리점과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체결행위 근절 필요 ○설립목적이 천연가스 생산기지, 배관망 등 설비 점검인데, 열병합발전소를 사서 운영하다가 자본잠식되어 매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 - 경기씨이에스(주)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779억원을 들인 열병합 발전소가 준공 2년만에 자본잠식되어 101억원에 민간에 매각 -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 필요 ○핫태핑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진행한 문제 - 핫태핑 공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 말고도 핫태핑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경쟁입찰을 할 필요 - 경쟁가능 분야에서는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이바지 필요 ○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평가 중간평가 결과,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문제 - 방만경영 개선 기획재정부 제1차 평가에서 추가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경영진의 의지 부족

35. 강원랜드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경영관리 및 영업부문	○ 탄광문화관광촌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고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최근 집행실적이 없는 등 지역연계사업 집행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오투리조트에 부당지원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당시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장은 표결당시 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 ○ 사장·부사장이 7개월동안 공석인데, 직무대행체제로 신규사장 취임시까지 직원 및 주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도박중독	○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 주변 사채업자를 근절할 대책 마련 필요
사회공헌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인 강원랜드의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 집행액의 77% 이상을 강원도에 편중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적으로 시행할 필요

36. 기초전력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연구개발 (R&D)	○ '13년 기초전력 연구과제가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관된 이후 기초전력에 대한 투자 및 기자재 확보·활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기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을 실시할 필요

37. 전략물자관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사업 관리	○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위반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

38. 한국표준협회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인증제도 등 관련 업무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원화방안 강구 필요 ○ 중국산 철근이 국산으로 위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취소 및 자진 반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한국서비스대상, 대한민국 혁신대상 등의 각종 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비, 광고비 등을 높게 받고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업무수행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으므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필요
기관운영	○ 한국표준협회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환수 등 시정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청렴도 평가점수와 내부감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청렴도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인재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로봇산업 육성	○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 인력양성 등 로봇진흥원 역할 확대 필요
장비 가동률 제고	○ 로봇제품의 시험평가 실수요 발굴을 위한 계획, 장비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로봇산업 육성	○ 로봇기업 지원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시행계획 정책 등 마련 필요
인력양성	○ 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로봇융합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
원전홍보	○재단에서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원전 안전성 홍보가 미흡하여 삼척 등 신규원전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중·고교 교과서 중 원전관련 내용과 아톰스토리 등 인터넷 홍보 컨텐츠가 편파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컨텐츠를 마련할 필요 ○퀴즈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집행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할 필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원전 안전 우려 및 청소년의 원자력에 대한 무관심이 높은 수준이므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청소년 인식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할 필요
이사회 등 재단운영	○호텔 등 이사회 개최장소의 부적절에 대한 작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프레스센터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사회를 사옥에서 개최할 필요 ○이사회 수당이 1시간에 1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회의수당을 하향조정할 필요

41.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홈쇼핑 사업	○ 유통센터 설립근거에 맞지 않는 대기업, 수입제품 판매 - 대기업, 수입제품 취급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판매대행 중단 필요
중기판로 지원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활성화 - 브랜드 통합, 판매관리시스템 구축 등 판매장별 개선 마련 필요 ○ 공동A/S센터 확대 필요 - 수요업체의 5%만이 참여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성 제기

42. 한국벤처투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모태펀드 운용	○문화콘텐츠펀드 투자 문제 - 영화산업 편중에 대한 해소 필요 - 투자계약서 수익 배분기간 검토 필요 -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 검토 필요 ○글로벌콘텐츠펀드 출자사업 및 운용 문제 - 해외의 특정 영화제작사에 집중 투자된 문제 - 공동운용사 출자사업 제재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각종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과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출자사업 투명성 강화 필요 ○지방펀드 운용 관련 - 지방펀드 재원확충 필요 - 지방펀드 적정 목표수익률 검토 필요 ○일자리펀드 운용 관련 - 일자리펀드 일자리창출 효과 확충을 위한 방안 필요
엔젤투자매칭 펀드 운용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시 시장실패 영역인 창업초기기업 육성 취지 강화 필요

43. 한국발명진흥회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영관리	○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직원 자녀수상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사업 관리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마련 필요 ○ 기초지역 지식재산센터 전문인력 역량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발명 특성화고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특허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성평가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향후 대책

44. 창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창업지원	○ 창업선도대학 - 창업선도대학 청년 벤처창업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경영관리	○ 장애인 고용 부진 - 장애인 고용 부진에 대한 개선책 마련 ○ 비정규직 증가 - 중기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소상공인 보증지원	○ 햇살론 안정적 지원 방안 - 저신용자(9~10등급)에 대한 햇살론 지원 활성화 방안 - 햇살론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방안 - 학부모세대(40~60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기관운영	○ 높은 비정규직 직원 비율 개선 방안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필요

4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경영관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누적된 인사적체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고객 편의성 증진 등 고객만족도 점수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사업관리	○사회적 약자 대상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IP보험을 통한 수혜기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및 상품다양화 대책 마련 필요

47. 한국특허정보원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기관 운영	○ 직원 채용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및 영유아 보육료 중복지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 부적정 ○ 계약직 인력의 과다 운영 및 처우개선 ○ 대전사옥 건립 관련 타당성 검토 ○ 사내 성희롱 및 성추행 근절 대책
사업 관리	○ 하도급 수의계약 관련 성민정보기술 등 특정업체의 독점 수주 방지 대책 마련 및 용역 수행업체의 관리 필요 ○ 선행기술조사 품질확보에 대한 대책 ○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작성방식 전환 및 감수물량 확대 계획 검토 ○ 영업비밀통합관리 지원프로그램 홍보 강화 ○ 외부용역사업의 직영업무 전환 검토

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 운영	○ 기관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만 성과급을 받는 문제 ○ 행사자료 누락 등 홈페이지 관리부실
연구 관리	○ 연구본부장이 다수의 연구과제 참여로 인해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수 있어 개선 필요

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 산업통상자원부

(1)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검열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어렵게 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각종 유관 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이 해당 공공기관의 용역을 맡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

(3) 산하 에너지공기업 관련

①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한 출자회사를 정리하되 부채 감축을 이유로 핵심사업을 매각하지 않도록 부채감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

② 일부 에너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③ 에너지공기업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

④ 에너지공기업의 충당부채에 대비하여, 현금화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⑤ 일부 공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하여 장부상으로만 부채를 줄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것

⑥ 산하 에너지공기업 퇴직자의 관련회사 재취업을 통한 해당 공기업과 관련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4) 최근 5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위직 참여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있으므로 성범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과 성범죄 발생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

(5) 국가중요시설의 위치 등 관련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글(Google)을 통해 쉽게 검색되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정보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

(6) 외국인투자 관련

①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자료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7) 전략물자 수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

(8) 민간기업의 전시산업 주관기관 선정 요건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9)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부과하는 통신망기본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무역보험의 보증심사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

(11) 무역보험 중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사항 및 그 경과를 보고할 것

(12)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및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13) R&D관련

① 뿌리산업 R&D비중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R&D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③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체적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섬유패션산업 관련

①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② 의류(섬유세라믹과 소관)와 가방·주얼리·안경 등(디자인생활과 소관)의 주무부서 이원화를 시정할 것

③ 국내 패션 산업 진흥을 위한 전시회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15) 자동차산업 관련

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완적 성격을 고려하여 두 방식의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그린카 발전전략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

②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정부·지자체·한전 간에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할 것

(16)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LNG 에코쉽을 도입할 것

(17)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우수 해외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

(18) 이케아(IKEA)가 가구전문점인지 대형마트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업태 분류 및 영업제한 적용대상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보험회사 등에 유출·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자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0) 산업단지 관리 관련

① 노후 산업단지 혁신사업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할 것

②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개발·분양·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토할 것

③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 노후 산업시설의 개선 및 재생 촉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22)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 기술개발과 산업계의 애로요인 해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이 미흡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4) 한국산업표준(KS) 마크가 위조된 중국산 철근 등이 유통·사용됨에 따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세관통관시 수입품에 대하여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5) 1381 인증·콜센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1381 인증·콜센터 인지도 및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6)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변화요구에 충분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언어·기술·통상 분야 대응체계를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27) 통상차관보의 직위로 통상 분야 대내외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상차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

(28) 개별 FTA 등 통상협상 현안

① 한·미 FTA 전문직자격상호인증(MRA)분야의 논의 실적이 미흡하고,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미국의 각 주(州)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나므로, 미국 중앙정부와 1:1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일본의회의 TPP 협상참여 반대결의가 미·일간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국회 통상소위에서도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하여 상세히 점검할 것

③ 한·아세안 FTA의 경우 임금이 낮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가격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④ TPP 관련해서 일본 국회가 무조건적인 관세 철폐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것이 미국과의 협상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FTA, TPP 등 통상 관련 협상을 국회 통상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⑤ TPP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포함, 오렌지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⑥ 비공개로 추진 중인 TPP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공공보건정책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바, 미·일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 목적의 제한에 반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 국회와 정보를

공유할 것

(29) 쌀 관세화 관련

① WTO DDA 협상에서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국내 쌀 가격 하락과 약 20만톤의 추가 쌀 수입이 예상되므로, 대안을 미리 강구할 것

② 쌀 시장 개방 시의 농가피해발생분야를 명확히 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농민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내대책을 논의할 것

(31)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②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은 2010년 이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③ 해외자원개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 것

④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부실 공사와 관련하여 전(前) 사장과 전(前) 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⑤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결정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감독 할 것

⑥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백서·보고서를 만들 것

⑦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져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적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것

(32) 석유공급, 주유소 관련

①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싸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것

②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 과정이 분절화되어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범부처차원에서 적발처리 시스템을 만들 것

③ 혼합 석유에 대한 가짜 석유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과세환급체계를 개선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④ 전자상거래 중 협의매매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한할 것

(33) 가스 관련

① 도시가스 요금에서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

②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시험생산 계획도 취소되는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③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이 수행한 용역 과제들이 서로 유사·중복되는 등 내용이 부실하므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④ 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외에 독성가스 안전도 관리하도록 할 것

⑤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4)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출자한 대한광물의 설립전후 주가가 폭등하여 주가 조작이 의심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고발조치를 할 것

(35) 동계에 전력사용량이 최대가 되는 국내 전력시장의 특징과 전력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36) 감사원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구축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부실업무가 사실로 확인된바, 2012~2013년 국회의 계통운영시스템 부실 운영 지적과 관련 전력거래소를 비호하고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며, 해외기관 기술조사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할 것

(37) 발전소 온배수 및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할 것

(38) 보성강댐 유역변경식 발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성강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39) 탄소 포집·재활용(CCU) 기술에 대한 실증·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40) 영흥화력 5·6호기 건설 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고려하여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

(41) 발전자회사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사택매입과정에서 각 발전사가 통상적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사택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

(42)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재검토할 것

(43) 원전 해체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현 시점에서 원전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44) 직류송전(HVDC) 관련

① 교류송전(HVAC) 방식에서 직류송전(HVDC)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할 것

② 신경기-신한울 765kV 노선을 직류송전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5) 현행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

(46) 원전 정산단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47) 안전한 전기공사를 위하여 직접활선공법 적용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시공방식을 개발할 것

(48) 원전 건설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9) 원전 및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성에 관한 주민신뢰를 확보할 것

(50) 원전 부품 납품업체 및 품질검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

(51) 부적절한 원전부품 재검증 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관리부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52)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 업체와 아이디·패스워드를 공유하는 등 구조적·관행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것

(53) 원전정책과 관련한 '국민소통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전정보 공개 시스템'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4) 전력계통운영 기관의 중앙급전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동 기관의 서울지역 관제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동 센터를 직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발전, 송·변전설비 정비 분야에서 한전KPS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중소기업청

(1) 보증공제사업 대기업 비중 과다 및 부실 우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홈&쇼핑 공공성 제고 노력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대기업 운영 등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는 신중히 재검토 할 것

(3) 나들가게 스스로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및 제휴서비스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

(4)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R&D 저변 확대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소공인 R&D 인력 양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6)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전통시장의 불결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도입 검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혼합형 시장정비 사업의 도입을 검토할 것

(8) 전통시장 안전점검 방식을 전수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변경하고, 안전시설 개·보수까지 지원을 검토할 것

(9)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몰의 외국산 제품 판매 관련 개선방안 및 활성화대책 마련할 것

(10) 전통시장 위험등급제 및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

(11)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및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12)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우수 프랜차이즈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지원성과 측정이 어렵고 교육부와 업무 중복인 비즈쿨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창업선도대학의 청년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5)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 발굴을 강화하고, 엔젤투자마트 등을 통한 투자 분위기를 확산할 것

(16) 공공구매 시정권고 불이행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17)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납품단가 2.3억원 미만의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수익보장이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

(18)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19) 홈&쇼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신제품 및 혁신제품 방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규 홈쇼핑 설립은 신중을 기할 것

(20) 홈&쇼핑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 및 답변 자료 미비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1) 독일 매장 축소 재검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HIT매장 운영방향 재검토, 미국 LA 매장 운영 개선 등 해외 중기제품 전용매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2) FTA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 발굴,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할 것

(23) 민간 금융기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및 신·기보 연대보증제 전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할 것

(24)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세제 감면 추가 및 정부 매칭펀드 도입을 검토할 것

(25)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학교 선정기준 및 취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26) 국립공고의 교육성과, 학습권 보장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27) KOSBIR 제도의 개별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의무비율을 설정할 것

(28)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29) 중소기업청 R&D사업에 대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30)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

(31) 중소기업청 자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32)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사업의 저조한 기업 참여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 상향을 검토할 것

(33) 회생 절차를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재기기업 전용 펀드 운용을 검토할 것

(34) 금융기관에서 회생절차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 특허청

(1) 정부 R&D 특허성과의 우수특허 확보 및 개인명의 출원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기술중개상담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3)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대출금 미상환시 대책을 마련할 것

(4) 위조상품 단속 특사경의 전담조직 확대 및 수사인력 증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와 지역사무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5)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 할 것

(6)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품질 저하 방지책을 마련·추진 할 것

(7)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

(8) 공모전 담당직원 자녀의 수상 등 사업주관 산하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추진 할 것

(9)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지원을 위해 분쟁다발 지역에 IP-DESK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10) 원자력 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고도화된 집약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1) IP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험상품을 다양화 할 것

(12)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특허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3)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소비자 중심의 특허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16) 특허청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특허정보원의 재위탁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독점 수주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17) 특허 관련 수수료 인상 등 조정이 있는 경우 5년간의 세입추계를 하여 입법예고에 반영하고, 올해 3월 수수료 인상 건과 관련하여 5년간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제출할 것

(18) 등록료 대폭 인하를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인 수수료 정책을 입안하고 공개한 후 수수료 조정을 실시할 것

4.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개 기관)

(1) 전기요금 관련

① 한전이 운영 중인 전기요금 할인혜택 확대를 위하여 본인 신청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② 대기업에 대한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③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적용기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

④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 및 구간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⑤ 아파트 전기요금 수납업무 시 지급하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⑥ 정부, 공공기관의 빈번한 전기요금 미납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⑦ 한전착오에 따른 과오납금 등 전기요금 과오납청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검침 및 계량 관련

① 검침 실수 및 계량기 오차 등으로 인한 환불 문제 개선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검침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② 검침사업자 선정 등 검침사업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

(3)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선하지 보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4) 전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5) 송전망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여 노후 송·변전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6) 지역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7) 한전직원과 검침원의 도전(盜電)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8)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관련

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주민의 일부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공개할 것

② 명확한 법적근거 또는 내규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 및 보상금을 집행할 것

(9)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부품(신형 쐐기형 클램프)의 납품업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임직원 인사에 있어서 과도한 지역간 격차나 사무직·기술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중소기업 채산성 제고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2)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원격검침 사업 추진에 따른 검침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주파수조정용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전에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정비할 것

(14) 송·배전선로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것

(15) (한전·발전자회사) 현대중공업 등 원전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제한 및 공개입찰참여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부정당제재조치를 실시할 것

(16) (한전·발전자회사) 자회사·출자회사·일부 민간회사에 대한 지나친 일감몰아주기 및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할 것

(17) (남동발전) 영흥화력 5·6호기 건설 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고려하여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

(18)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 필수유지인력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9) (동서발전) 자메이카전력공사(JPS)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동서발전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0) (발전자회사)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할 것

(21) (발전자회사) 성능미달의 암모니아 측정기가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22)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인한 우드펠릿, 폐유정제유, 부생연료유 등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23) (발전자회사)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이상의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4) (발전자회사) 발암물질 배출여부 등에 대한 LNG발전소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

(25) (발전자회사) 발전자회사의 산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이동에 대한 개선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국수력원자력

(1) 안전관리 비용 및 사회적 갈등비용을 포함하여 원전발전 단가를 재추산하고, 노후원전 고장빈도 등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고리, 월성 1호기의 폐로를 검토하며, 장기적인 폐로 전략을 수립할 것

(2)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선제적인 설비교체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 후에 관련 설비를 교체할 것

(3) IEA의 해체비용 산정수준을 감안하여 원전해체비용을 조정할 것

(4) 원전해체비용의 일정수준을 현금으로 적립하고, 관련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원전해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5) 토륨이나 핵융합발전 등 미래에너지 투자를 실시할 것

(6) 한국수력원자력이 RPS 이행을 위해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산업부와 협의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

(7) 한중일 3국간 원전안전을 위한 레짐을 형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정부간 협력과 한수원과 민간 운영자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8) 원전비리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액이 전액 수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원전 안전운영 관련

① 월성 3호기 취수구 잠수사 사망사고 대처시 한빛 원전에서의 유사 사고경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망 미설치, 작업 중 취수펌프 작동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념할 것

② 하청업체 직원에 피폭량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규제기관의 주재관이 직접 입회하여 검사하도록 할 것

③ 한빛 3,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관막음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막음률 증가 시에는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고, 향상된 재질의 인코넬 690으로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것

④ 증기발생기 교체 후 발생하는 폐증기발생기의 처분기술을 마련하고 보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⑤ 2014년 한울 1, 2호기 주증기안전밸브 교체설계 용역시 프랑스 코드를 미국코드로 변경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미국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인허가 편의를 우선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⑥ 원전사고 대비 물품을 확충하고,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을 대비한 원자력 방호훈련을 실시할 것

⑦ 영광 3호기 정지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⑧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

⑨ 원전 정기검사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재관이 직접 입회하도록 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원전 건설 관련

① 2014년 실시한 삼척원전 신규건설 주민투표 결과 주민 67%가 투표해 그 중 85%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삼척원전 신규건설을 재검토할 것

② 2012년 삼척원전 부지선정 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갈등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11) 주변지역 협력 관련

① 섬진강 댐 인근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할 것

② 원전 장기고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법정 지원사업 외에도 이익금을 주민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③ 본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월성원전 온배수양식장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12) 품질검증 관련

① 원전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용역 사업에 비리전력 업체와 비리사실 전직 직원이 포함되도록 검증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

②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위조비리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RSCC社가 납품한 케이블 역시 피복이 벗겨지거나 구매규격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

(13) 용역·물품계약 관련

① 원전비리경력업체가 회사명만 변경하여 원전안전과 직결된 정비 용역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비협력업체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② 원전비리의 주요원인인 수의계약 비중이 2014년 7월 현재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출 것

③ 원전비리로 입찰참가제한 중인 업체가 비리로 재차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기간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입찰비리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계약규정시행세칙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

④ 현대중공업 등 원전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제한 및 공개입찰참여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부정당제재조치를 실시할 것

⑤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공기달성 요구, 추가비용 미지급 및 대가 지연 지급,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미적용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14) 방사선 관리용역 관련

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관리업무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이 아닌 정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할 것

② 소수업체의 방사선관리용역 독점, 용역업체와의 담합의혹, 용역비용 과다책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

③ 근로자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계약을 하지 못한 한빛 3발전소 용역업체 직원을 복직시키고, 한수원에서 근무 중인 600여개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

(15) 경영 관리

① 원전의 안전성 홍보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② 본사 경주 이전에 따른 사택매입시 할인노력이 부족했고, 사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국토부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했으므로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③ 연봉제를 확대실시하고 통합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할 것

④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

6. 한국가스공사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 발생 및 경제성 저조 관련

①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의 경제성 및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외국 컨설팅회사가 정확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의 실태 및 원인 파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 해외자원개발 역량 부족 관련

① 탐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탐사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전문인력 확충,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관련

① 가스공사가 주배관망을 설치했는데도 가스공급업체들이 소매배관 설치와 가스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②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

③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과 낙후지역의 가스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수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천연가스 수요예측 오차가 과다하여 대규모 스팟(spot) 구매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소 건립, 계절별 수급변동 등을 포괄하는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할 것

(5) 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에 의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6) 도시가스 공급가격 산정 시 사회공헌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을 요금에 반영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요금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가스공사 임원이 과도하게 예선사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독점적 계약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

(8)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

(9) 배관망에 대한 순찰을 줄일 계획을 세웠는데,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배관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 것

(10) 가스공사와 장학재단으로부터 이중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이중지원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7. 한국석유공사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손실 발생 및 경제성 저조 관련

①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의 경제성 및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외국 컨설팅회사가 정확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④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고 사업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백서를 제작하여 동일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외자원개발 역량 부족 관련

① 외국협력회사에 탐사사업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석유공사가 직접 탐사사업에 참여하여 탐사시추역량을 배양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석유공사는 개발을 담당하고 가스공사는 액화, 운송을 담당하는 등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효율적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형 셰일가스 모델을 개발할 것

(4)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투자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5)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급업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알뜰주유소의 품질 및 소비자 편익 향상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7) 동반성장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할 것

(8) 상당규모의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직원복지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한국지역난방공사

(1) 대구 지사의 사용연료를 LNG로 전환할 것

(2) 내구연한이 남은 열배관이 조기 보수·교체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제습냉방기의 시장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

(4)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이 비싼 지역까지 열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할 것

(5) 세대 난방계량기 고장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난방계량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상당규모의 상품권 및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위한 과도한 지출을 시정할 것

9. 대한석탄공사

(1) 부실경영 관련

① 에어쿨링시스템을 한 업체와 수년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시정할 것

② 청렴도 조사 결과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재무관리 관련

① 석탄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② 산재보험료 수준이 과다한 문제를 개선할 것

③ 유휴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려 노력할 것

(3) 몽골 홋고르 탄광의 투자금 회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광산사고 예방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5) 안전장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10. 한국광물자원공사

(1) 획일적인 부채감축계획이 우려되므로 부채감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

(2) 해외자원개발 역량의 부족

① 해외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 역량을 보완할 것

② 해외자원개발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민간과의 컨소시엄 위주로 투자할 것

③ 해외자원개발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

(3) 해외자원개발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① 향후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50%이상 지분을 획득할 시에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할 것

②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③ 생산단계보다는 탐사와 개발단계에 집중할 것

(4) 개별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① 호주 와이옹사업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회수 대책을 마련할 것

② 볼레오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③ 리튬 2차전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리튬 개발이 다소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④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유연탄사업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⑤ 볼리비아 리튬배터리용 양극재 생산 R&D사업의 계약이 파기되었

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였으므로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보고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FARWEST사(社) 인수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로 인해 주식을 비싸게 인수하고, 와이옹사업에서 무등록 로비스트를 이용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의 부적절한 경영조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도시광산사업 관련

① 폐기물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재활용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폐자원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것

(6)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분 참여한 대한광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7) 광산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광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8)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광물자원개발계획을 마련할 것

(9) 광물자원공사가 동, 니켈을 비축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10) 미래전략광물로서 토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

(11) 간부직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므로 인사채용과정을 개선할 것

11. 한국무역보험공사

(1) 국가보안지침 등을 고려하여 도청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2) 신규 인력채용 시 전문인력 우대방침 등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3)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 여부 및 방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과 공식적이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방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것

(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비중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중소기업 무역보험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청와대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6) 단기수출보험의 중소기업 요율이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기금운용배수의 안정화를 위한 책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 무역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9) 미회수채권 규모가 큰 반면, 회수실적은 저조하므로 보험 인수심사 시 리스크관리 방식 개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산조사 강화 등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0) 엔저 상황 등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 수출보증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 신규기법을 활용한 선박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 1인 무역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국가보안지침 등을 고려하여 도청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3) 수요가 많은 신흥국 위주로 무역관을 개설하고, 열악한 신흥국 무역관에 대한 감사도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 신규 직원 채용시, 전문인력 우대방침 등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5) 부처별로 산재한 수출 관련 사업의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해외진출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것

(6)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와 직구 활성화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7) 현재 지방지원단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단 확대를 검토하고, 수출전문위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중소기업의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

(9) 해외전시회 참가시, 유관기관이 각각의 한국관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과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일괄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 수출첫걸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것

(12) 해외진출기업의 애로개선 실적이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해외순방시 투자성과 등을 실제 도착된 실적을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외국인투자유치실적 통계를 '도착' 기준으로 전환하여 보고하며,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4) K-Move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15)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

(16) U-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U-턴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므로 실적부진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7) 킨텍스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사용후 핵연료 관리

① 벨기에에서 토륨을 이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연구 중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

② 사용후핵연료 개념 및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준비를 조속히 실시할 것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단층 위에 건설되었다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중재신청 등 적극 대응할 것

②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사고를 대비하여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례 훈련을 실시할 것

③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연내 1,000드럼 더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빛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이므로 조속히 해결할 것

④ 해상운반선의 운영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⑤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

(3) 방폐기금 관리센터의 본사 이전방안을 검토할 것

14. 중소기업진흥공단

(1) 외국전문인력사업의 조기귀국 사례 방지를 위한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2)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확대를 위해 근로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것

(3) 정책자금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15.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이후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못하므로,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

(2)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화학업체,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안전강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재난안전책임기관임에도 실제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 및 교육·재난대응매뉴얼 등이 부실한 상황이므로 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단지 안전에 대한 진단권한이 개별법에 의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

(5)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영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6) 변화된 기후여건을 고려한 우배수관 점검 등 인프라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합동방재센터가 부족하고 책임성 있고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합동방재센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효과도 미진하므로 사업성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9) 구조고도화사업이 부동산투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할 것

(11) 산업단지 내·외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 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12) 적절한 입지수요를 분석을 통해 수요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산업단지 등 산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할 것

(13)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4) 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관리기본계획에 미분양사태, 노후산단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출할 것

(15) 산업단지공단에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6) 임대료 인상률 등 임대료 관련 통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것

(17) 산업단지 내 열악한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의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18) 산업용지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9) 산업단지공단의 높은 비정규직비율,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0)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현지기업체 활용 및 현지 인력 채용 등 지역상생발전 및 현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21) 법인카드 과다보유 및 심야사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6. 한국전기안전공사

(1) '전기안전 119'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및 이용환경을 개선할 것

(2)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업체의 영업개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안전예산을 확대하여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및 취약계층·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

(4) 가로등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5) 안전점검 불합격설비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6) 사용전검사의 1인 검사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7) 법정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8) 정확한 전기재해통계 작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

(9) 비상발전기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상발전기 활용방안을 도출할 것

(10)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캠핑카에 대한 체계적인 전기안전검사 방안을 모색할 것

(11)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징계 등에 있어 직원 간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12) 고층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안전점검대책을 수립할 것

(13) 전통시장 등 취약장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한국가스안전공사

(1) 노후 LPG 용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LPG 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 및 불법 충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불법으로 수입되는 LPG 용기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수입 충전제품의 인터넷 유통을 억제하는 등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

(3)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배관건전성 관리 프로그램(IM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민간 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독성가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독성가스 용기 관리를 강화할 것

(6) 캠핑카에 대한 가스안전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7) LPG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전통시장 등 안전 취약 장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국외출장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국외출장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에너지관리공단

(1) 에너지바우처 관련

① 농어촌 거주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할 것

②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보급목표를 상향할 것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관련

① RPS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전년도 발전량에도 인정되는 등 발급기준이 모호하므로 발급기준을 명확히 할 것

② 현 RPS제도 운영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RPS와 REC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4) 태양광 사업 관련

① 태양광대여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포인트(REP)를 비태양광 실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③ 태양광 폐기모듈을 파악 및 관리할 것

(5) 지열이용검토 관련

① 시공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지열이용 검토서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침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지침을 개정할 것

② 지열이용검토서 심의위원에 비리 전력자, 비전문가 등이 포함되는 등 인력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6) 노인시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수도권과의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원 보조금 규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

(7) 교육기관의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되,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8)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관련

①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높이고 설비 가격을 낮추는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을 권장하는 정책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것

②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국산화율을 제고할 것

(9) 열병합발전소 건설 인허가 후 수급업체의 동의 없이 타 건설업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간 프리미엄이 오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외국에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해외 현장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11)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대상품목에 대한 샘플조사비율을 높일 것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13) 울산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19. 한국광해관리공단

(1) 광해방지사업 관련

① 지반침해사건에 대해 선구호조치를 하는 등 보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② 중금속에 오염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 조속히 광해방지사업을 착수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

(2) 정선 지장천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① 오염원인인 폐석장에 대해 광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폐석장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광해방지사업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3) 설계변경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

(4) 해외 사업 관련

① 무리한 해외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부실한 해외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② 해외 광해방지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5) 출자회사 관련

① 강원랜드를 제외한 5개 중소 출자회사의 누적적자를 개선할 것

② 공단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③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인 강원랜드의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역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6)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 신청이 저조하므로, 사업을 재조정할 것

(7) 폐광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것

20. 한국석유관리원

(1)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관련

① 가짜석유 근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장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② 가짜석유 신고-적발-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③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적발건수가 많으므로, 지방자치

단체, 경찰과 연계한 단속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④ 가짜석유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적발된 가짜석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업소에서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관리를 강화할 것

(4) 단속정보 제공 및 향응이나 대가 수수 등 비위 사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짜석유 단속권한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고, 석유관리원은 시료분석만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이 현장실사 업무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소비자에게 휘발유 성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21. 한국전력거래소

(1) 수요관리사업 초기시장 형성과정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

(2)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자력 정산단가 및 보정계수를 산출할 것

(3) 발전소의 노후정도,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례산식에 따라 용량정산금(CP)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것

(4) 발전기동계획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비정상적인 정지 이외에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저발전기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고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차액계약 제도에 위약금 부과규정을 두는 등과 같이 일정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울지역 관제센터 운영은 중단하고 동 센터를 직원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것

(8) 차세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9)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EMS) 구축용역 계약 및 하드웨어 납품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

(10) 감사원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영 및 한국형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구축실태」 감사결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부실업무가 확인된바, 2012~2013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영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에 대해 반박 및 허위보고를 일삼은 前 EMS팀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할 것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은 기반구축과 연구개발로 지원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에서 기반구축사업이 실시된 지역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두 지원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장비구입 중 외국산 장비가 60%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산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산장비구입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장비 및 재료비 구입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연구노트 관리대장 의무화 등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 기술거래 및 평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술사업화가 미진하므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5)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가 칸막이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내부규정에 의해 승인인사 발령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8)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중요하므로 도덕성과 청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국내시험인증시장의 25%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달물품 검사규정 미준수 및 처리절차 부적정, 시험성적서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이차전지에 대한 국내시험인증기반이 거의 없어 안전성 검증문제, 국내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등으로 시험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시험인증 부실로 업무정지를 받는 것은 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7) 비정규직의 비율이 52%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력구조를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시험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할 것

(9)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 절차의 복잡성 및 업무처리 공정성, 소요비용 과다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어 외화 유출, 우수한 신기술과 시제품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기 해외인증 업무 협약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한국디자인진흥원

(1)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2)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디자인전문인력의 파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3) 디자인 R&D 융합 관련하여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과 경쟁력이 낮아 성과가 미흡하므로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4) 중국 북경에 1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5)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업무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임대료와 관리비 책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하여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관리가 공정성과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관리비 책정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R&D 과제의 사업화가 낮으므로 R&D 사업화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R&D 과제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R&D 성과 검증 데이터 검증 강화를 위해 회계법인(회계)의 검증 및 성과지표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장비구입 중 외국산 장비구입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산 장비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산장비구입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4) 1인당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관리가 200개가 넘어 제대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정밀실태조사가 되지 못하므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자체적발 실적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비 및 재료비 구입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연구노트 수불관리대장 의무화 등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7) 국가 R&D에 대한 성과를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명의 출원자에 대한 참여제한을 하는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8) 공공기관의 청렴도조사 결과에서 준정부기관 중 85위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사업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9)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10) 10대 핵심소재사업(WPM)에서의 민간매칭비율이 당초 계획했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기초전력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것

27. 한국세라믹기술원

(1) 최근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비리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 수준을 제고하도록 할 것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2) 온라인 구매지원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R&D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상담지도직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방안 마련
②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마련

(3) 부가서비스·사후관리 등 실효성 있는 나들가게 운영지원 필요, 특히 나들가게 홍보 및 기존 점포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4) 다양한 상품공급을 위하여 민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을 할 것

(5)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공동 서비스, 마케팅 교육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6) 온누리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판매 확대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0. 한국전력기술

(1) 원전 안전강화를 위하여 다중 오작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2)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신·재생설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

(3) 기관이 보유한 핵심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실시하고 무단 유출자는 엄격하게 징계할 것

31. 한국원자력연료

(1) 2011년 원자력발전 연료봉 불량품 4,700개가 발생하여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연료봉 상단고정체 고유코드 오각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독점적 연료공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대전 제3핵연료 가공공장 증설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2. 한전KPS

(1) 월성3호기 취수구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및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2) 소수의 기업만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는 관행을 시정할 것

33. 한전KDN

(1) 한전과의 수의계약 이외에 기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하도급비율 제한에 대비하여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조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할 것

34. 한국가스기술공사

(1) 임직원이 가스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것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산 가스검출기 사용을 확대할 것

(3) 임원자녀 특별채용, 지사장 처 소속 보험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등의 비리행위를 근절할 것

35. 강원랜드

(1) 탄광문화관광촌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고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지역연계사업 집행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3) 주변 사채업자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

36. 전략물자관리원

(1) 수출중소기업의 전략물자 대응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7. 한국표준협회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일원화방안을 강구할 것

(2)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취소 및 자진 반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한국서비스대상, 대한민국 혁신대상 등의 각종 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비, 광고비 등을 높게 받고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업무수행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으므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한국표준협회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환수 등 시정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 청렴도 평가점수와 내부감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청렴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8. 기초전력연구원

(1) 체계적인 기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할 것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 인력양성 등 로봇

진흥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로봇제품의 시험평가 실수요 발굴을 위한 계획, 장비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 로봇기업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과 시행계획 등을 마련할 것

(4) 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로봇융합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 원전 홍보

① 중·고교 교과서 중 원전관련 내용과 아톰스토리 등 인터넷 홍보 컨텐츠가 편파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컨텐츠를 마련할 것

② 퀴즈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집행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것

③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

④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청소년 인식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

(2) 이사회 등 재단운영

① 향후 이사회를 사옥에서 개최할 것

② 이사회 수당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회의수당을 하향조정할 것

41. 중소기업유통센터

(1) 유통센터 설립근거에 맞지 않는 대기업, 수입제품의 홈쇼핑 판매대행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2)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공동A/S센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참여업체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42. 한국벤처투자

(1) 문화콘텐츠 펀드 관련

① 영화산업에 투자가 편중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② 투자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한 수익률 집계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2) 지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위해 지방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등 지방펀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43. 한국발명진흥회

(1)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직원 자녀수상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44. 창업진흥원

(1) 장애인 고용부진과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 창업선도대학의 청년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2)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 및 관리를 강화할 것

4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 사회적 약자 대상 공익변리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고객 편의성 증진 등 고객만족도 점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7. 한국특허정보원

(1) 하도급 계약 관련 성민정보기술 등 특정 업체의 독점적 수주 방지를 위한 입찰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기관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지만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

(2) 연구본부장의 과제 중복참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Ⅶ. 특기사항

□ 위원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현황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
김동완 위원	1	◦ 고압송전선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건강조사 상황
김한표 위원	3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꼭 살아야한다! ◦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이대로 괜찮은가? ◦ 국내 원전 전문가 60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국내 원전 안전한가?'
전하진 위원	1	◦ 2014년도 국정감사 활동보고서
정두언 위원	1	◦ 나들가게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및 경쟁력 제고방안
정수성 위원	6	◦ 특허괴물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전통시장 안전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 산업시설 노후화 진단 및 시사점 ◦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강화 및 수출촉진 방안 ◦ 단기수출 무역보험 민간개방의 문제점 및 시사점 ◦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홍영표 위원	3	◦ 피감기관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 ◦ 망가진 국가에너지 대계 ◦ 후쿠시마를 넘어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최고책임자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 증언 -
노영민 위원	6	◦ 전기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 통일 전·후 동서독 전력계통 및 전력산업통합 사례분석 ◦ 센서산업 육성전략 ◦ RHO(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지열시장 확대 방안 ◦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 스마트러닝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
백재현 위원	5	◦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과 방향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노둣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총체적 검토 - ◦ 원자력발전, 기로에 서다 - 노후원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필요 - ◦ 안전성 미검증, 불량제품 방치하나 -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안전 지켜내야 - ◦ 스타트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해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WITH캠프 -
부좌현 위원	8	◦ 태양광 리사이클링 시스템 정책방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과제 ◦ RFS(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 현황 및 정책 제언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현황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 포함 - ◦ 발전소 온배수 현황과 정책과제 ◦ 소상공인방송 경쟁력 제고 방안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오영식 위원	2	◦ 핵발전소 수명연장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동반성장 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CSV모형
이원욱 위원	6	◦ 변리사 제도 개선 및 특허청 역량 강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방향 ◦ 소상공인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인공태양, 핵융합 기술의 세계 ◦ 왜 생존가격인가?
이정현 위원	2	◦ 광양만권 개발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통합물관리 관점의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위 원	발간 종수	자 료 집
전순옥 위원	3	◦ 자동차산업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미스매치 실태와 정책과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 동대문 마케팅 기반 조성 -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신시장 창출 -
전정희 위원	4	◦ 제4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2018) 평가와 개선 과제 ◦ 전력계통운영시스템과 발전비용의 함수관계발전비용 정산의 虛와 實 ◦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비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조경태 위원	2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북미 셰일가스 분석보고서
김제남 위원	2	◦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연구 ◦ 혈세탕진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위한 기초보고서